

NGO SERIES #14



참여연대 보고서

유석춘·왕혜숙 공저

발 간 사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NGO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익숙한 것이 되었으며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만큼 날로 커지고 있다. NGO의 숫자도 급속하게 늘어나서 정부에 등록된 숫자만 해도 3,800여개가 넘고 있다. 언론에서는 NGO 섹션을 따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였다. 학계에서도 ‘비영리학회’, ‘NGO학회’ 등 NGO 관련 연구그룹이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한국에서 불과 10여년 사이에 NGO가 급성장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NGO의 급성장은 한국사회의 강한 활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에너지가 NGO의 양적 팽창에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숙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NGO의 질적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학계의 노력이다. 최근 들어 NGO 관련 연구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NGO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NGO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선언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NGO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의 현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차원에서 찬반 양론이 경쟁하는 가운데 정교한 이론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기업원에서는 한국의 NGO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NGO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다. 양적으로 급팽창한 NGO의 활동에서 보여지는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한편 살려나가야 할 장점들을 옹호함으로써 NGO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시리즈가 NGO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 언론인, 일반인들에게 토론의 소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2년 6월

자유기업원장 민병균

훑어보기

이 보고서는 지난 12년간 참여연대의 임원직을 차지했던 531명 임원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다. 참여연대의 인적 네트워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참여연대의 531명 임원들이 형성하고 있는 조직 내부의 연결망이다. 이는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 연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차집단을 통해서 맺고 있는 관계가 참여연대라는 단체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분석 결과 참여연대를 움직이는 주요 임원들은 소위 우리 사회의 '파워 엘리트'라 불리는 소수의 내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어느 집단에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너서클'은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항상 열려 있다고 많은 이들이 믿고 있고, 참여연대 스스로도 그러한 점에서 자신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호소해 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한 독과점적 지배구조라는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그들이 비판하는 삼성과 같은 기업집단 나아가서 비록 한 때나마 그들이 혹독하게 비판의 날을 세웠던 국가기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이 밝혀졌다.

두 번째는 참여연대라는 시민운동 단체가 시민사회 영역을 넘어 국가 영역과 맺고 있는 관계이다.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권력 진출은 이미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이번 참여연대 연구를 통해서도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정부로부터 독립된 영역에 존재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서로 포섭되고 동원하며 연계되어 있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절대 다수의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은 시민단체와 권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유착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은 사실상 동일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혹은 상호 감시가 사회과학 서적에만 등장하는 서구의 개념임을 폭로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시민사회와 권력의 유착이 서로에게 표면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 주며 인기영합적인 정치를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시민운동의 정책적 목표가 국가에 의해 구현됨으로써 시민운동은 권력의 쟁취를 최종적인 목표로 삼게 된다. 국가 역시 정치영역을 뛰어 넘어 직접 시민사회를 상대로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매진하게 된다. 이러한 상승작용은 결국 국가와 시민사회의 유착을 통해 정상적인 정치과정을 무력화하고 정치가 대중의 말초적 감성에 호소하는 행태를 가속화시킨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삼성보고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라고 비판하였던 연고주의로부터 그들 자신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엘리트 집단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조직운영은 물론 연고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정책적 목표를 구현하는 지

랫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연고라는 메커니즘은 어쩌면 삼성이라는 대기업집단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리고 참여연대가 12년의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성장하는 기적을 가능케 한 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동력은 단순한 경제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을 넘어서 한국사회 전반의 운용 메커니즘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상 지난 반세기의 압축적 근대화와 정치적 민주화 과정 역시 그 기저에 인적 네트워크 혹은 연고가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한국적 특수성을 단순히 근대화의 장애물이나 전근대적 유산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자원으로 재인식하고 나아가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디딤돌로 활용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목차

발간사	2
훑어보기	3
 I. 서 론	7
 II. 참여연대 임원의 분석 방법	9
1. 임원의 정의	9
2. 자료 수집 방법	14
3. 자료 분석 방법	18
 III. 참여연대 임원의 기본 통계	19
1. 직 업	19
2. 출생지역	20
3. 연 령	22
4. 출신 고등학교	22
5. 출신 대학교	24
6. 경 력	26
7. 참여연대 임원의 활동 기간과 직책 수	26
 IV. 참여연대의 지배구조	31
1. 회원 참여율	31
2. 참여연대 운영위원·집행위원의 성격	34
3. 참여연대의 폐쇄적 지배구조	38
 V. 참여연대의 이너서클	42
1. 인물별 네트워크 분석	46
2. 변수(집단)별 네트워크 분석	53
 VI. 참여연대의 권력유착	60
 VII. 결 론	88

참고문헌	91
부 록1	93
부 록2	105

I. 서론

2005년 8월 3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사회연대’(이하 참여연대)는 A4 64장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의 제목은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해부한다」였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삼성이라는 기업이 고위 공직자, 법조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파워 엘리트들 사외이사 등의 임원으로 기용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비공식적으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 보고서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투명한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존재는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라 주장하며, 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삼성공화국”의 도래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삼성이라는 한 기업집단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서, 한국사회 전반의 운용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제기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의 병폐로 지목 받아오던 뿌리 깊은 연고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일군의 이른바 ‘진보세력’들은 연고를 전근대사회의 유산이며, 근대화의 장애물이라고 흔히들 낙인찍기 일쑤였다. 이러한 맥락이야말로 참여연대가 삼성 보고서를 발표한 이념적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한국사회의 연고적 메커니즘에서 참여연대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의구심에서 시작한다.

참여연대는 창립 이후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주류로 자리 잡아왔다. 시민운동은 두 차례의 낙천·낙선 운동을 주도하며 탈법·위법 논란을 명분과 힘으로 잠재울 만큼 파위를 보여주었으며(한겨레 21, 2004, 제526호), 그 힘의 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서 있음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 그만큼 참여연대는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되었으며, 어떤 면에서 시민운동계의 삼성과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우려는 참여연대 임원의 공직진출 현황을 통해 그 심각성을 드러낸다. 참여연대 전체 임원 531명 가운데 직업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임원의 숫자는 총 416명이었다. 이 416명 가운데 150명의 임원이 총 313개의 공직을 맡았음이 이번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더구나 이 313개의 공직 가운데 121개의 공직은 권력의 핵심이라는 청와대 관련 직책이다. 이제 참여연대는 더 이상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다. 국가기구 요소요소에 침투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하나의 권력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12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순수한 시민단체로 출발한 참여연대가 국가권력의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세력으로 변신한 성장 메커니즘은 과연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바로 참여연대의 성장 메커니즘이 삼성이 이용하는, 또는 삼성을 움직이는 메커니즘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활동을 자임하며 존재의 이유를 찾아온 참여연대의 이면에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음을 고발하고자 한다.

II. 참여연대 임원의 분석 방법

1. 임원의 정의

(1)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개념에 대한 언급이 결여된 경우

참여연대를 구성하는 다양한 역할 가운데 어떤 직책들이 임원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참여연대의 정기총회 자료집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참여연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기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 의결하는 회의로서 1년에 한 번 소집된다. 이 회의의 진행을 위해 준비되는 정기총회 자료집은 총회에 보고할 주요 사항과 의결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연히 이에는 참여연대 주요 임원들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집을 기초로 우리는 참여연대의 임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공동대표, 2) 감사, 3) 고문, 4) 자문위원, 5) 운영위원, 6) 집행위원, 7) 정책위원(정책자문위원 포함), 8) 사무처장단(협동사무처장 포함). 임원은 이상과 같이 여덟 가지 범주의 직책을 가진 인물로 구성된다. 각 범주에 소속된 임원의 역할과 선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정관 제4절 제24조).

감사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는 자로, 임기나 선출방식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으며, 대부분 총회에서 약간 명의 감사를 임명한다(정관 제4절 제27조).

고문은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 임기와 인원수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으며,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이 고문으로 추대된다(정관 제4절 제25조).

자문위원 역시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 임기와 인원수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으며, 참여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각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정관 제4절 제26조).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며, 이를 구성하는 이들이 운영위원이다(정관 제2절 제14조).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정관 제2절 제15조 제1항).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정관 제2절 제15조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정관 제2절 제16조).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정책위원장단과 선출직 집행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정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활동기구의 임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정관 제2절 제19조).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며, 이를 구성하는 이들이 집행위원이다(정관 제3절 제20조). 또한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집행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두는데,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정관 제3절 제23조).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정관 제3절 제21조 제1항).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이 되는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정관 제3절 제21조 제2항).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정관 제2절 제12조).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하며,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실행위원과 산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정관 제5절 제28조). 정책위원장단은 운영위원회가 선출하며, 이들의 임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그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정관 제5절 제29조). 정책위원이 정기총회 자료집의 임원 인선안(案)에 포함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4년이다.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장과 협동사무처장으로 구성되는 사무처를 둔다(정관 제5절 제31조).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정관 제5절 제32조).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정관 제5절 제33조).

<표 2-1> 참여연대 임원의 연도별 구성

구분	94/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전체	%
공동대표	3	3	3	3	3	3	4	3	2	3	2	3	35	1.5
사무처장단	1	1	1	5	6	7	7	6	9	7	7	6	63	2.7
감사	2	2	2	1	1	1	2	2	2	2	2	2	21	0.9
고문	7	7	12	13	6	21	25	28	10	10	10	10	159	6.8
자문위원	35	31	36	50	29	80	80	79	73	55	55	62	665	28.3
운영위원	74	75	97*	101	62	91	116	118	95	85	84	81	1,079	45.9
집행위원	22	25	22	35	1**	27	33	33	26	31	25	35	315	13.4
정책위원***										2	2	9	13	0.6
합계	144	144	173*	208	108	230	267	269	217	195	187	208	2,350	100.0

주 : * 1997년의 경우 정기총회 자료집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의 수는 98이고 임원직책의 수는 174이다. 그러나 이 해의 임원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석연’이라는 인물이 운영위원 범주에 두 번 등장함을 발견할 수 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보고서는 이 두 이석연을 동일한 하나의 인물로 간주했다. 따라서 1997년 참여연대 운영위원 수는 97명이고, 임원직책수는 173개로 통일한다.

** 1999년 정기총회 자료집은 집행위원장만을 밝히고 있어 집행위원의 명단을 파악할 수 없었다.

*** 정책위원이 정기총회 자료집의 임원 인선안(案)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다.

<그림 2-1> 참여연대 조직구성



다음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분석기간은 참여연대가 창립한 1994년(9월 10일)부터 2006년 2월 현재까지로 정한다. 1994년도와 1995년도의 임원 자료는 통합된 자료만이 입수되어 두 해는 한 해로 처리하였다. 그에 따라 분석기간은 모두 12년의 기간이 된다. 이 12년간 참여연대의 각종 임원에 해당하는 직책은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두 2,350개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참여연대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의 수는 직책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 인물이 여러 해에 걸쳐 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와 한 해에 복수의 임원 직책을 겸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차별 중복자들과 겸직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표 2-2>를 작성하였다. 이 표는 한 해에 한 인물이 두 직책 또는 세 직책을 겸직하는 사례로 인해 임원의 수가 직책의 수보다 적은 값을 보이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또한 이 표는 해가 바뀔때 따라 전년도에 활동하던 임원 가운데 남은 임원과 새로 진입한 임원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해인 1996년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해의 참여연대 임원직책은 총 144개이다. 이 가운데 두 개의 직책을 겸직한 인물은 16명, 세 개의 직책을 겸직한 인물은 5명이다. 따라서 한 직책을 가진 임원 97명이 차지하고 있는 직책 97개($97 \times 1 = 97$), 두 직책을 가진 임원 16명이 차지하고 있는 직책 32개($16 \times 2 = 32$), 세 직책을 가진 임원 5명이 차지하고 있는 직책 15개($5 \times 3 = 15$)를 합하면, 118명($97 + 16 + 5$)의 임원이 144개($97 + 32 + 15$)의 직책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표는 1996년의 임원 118명 가운데 전해('95/'96)에도 임원으로 활동한 경우가 104명이고, 신규로 진입한 임원은 14명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94/'95년 및 '96년 두 해 동안 임원으로 일한 사람을 누적적으로 파악해 보면 '94/'95년에 활동하였던 120명의 임원에 96년에 신규로 진입한 임원 14명이 추가되어 134명이 됨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2006년까지 반복하면 참여연대 임원을 구성하는 총 2,350개의 직책을 자연인 531명이 맡아왔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12년간 참여연대에서 2,350개의 임원 직을 차지했던 531명의 인물들이다.

<표 2-2> 참여연대 임원직 중복과 신규 임원 현황

구분	직책수	겸직수	사람수	기존임원(An)	신규 임원(Bn)	누적합계(Cn), Cn=Cn-1+Bn
94/95	101	1	101	-	-	120
	28	2	14			
	15	3	5			
	144	합계	120			
96	97	1	97	104	14	134
	32	2	16			
	15	3	5			
	144	합계	118			
97	131	1	131	107	43	177
	30	2	15			
	12	3	4			
	173	합계	150			
98	149	1	149	151	24	201
	38	2	19			
	21	3	7			
	208	합계	175			
99	108	1	108	18	90	291
	-	2	-			
	-	3	-			
	108	합계	108			
00	167	1	167	140	55	346
	42	2	21			
	21	3	7			
	230	합계	195			
01	194	1	194	166	60	406
	46	2	23			
	27	3	9			
	267	합계	226			
02	192	1	192	187	39	445
	50	2	25			
	27	3	9			
	269	합계	226			
03	154	1	154	147	33	478
	30	2	15			
	33	3	11			
	217	합계	180			
04	126	1	126	136	19	497
	36	2	18			
	33	3	11			
	195	합계	155			
05	127	1	127	132	20	517
	30	2	15			
	30	3	10			
	187	합계	152			
06	123	1	123	146	14	531
	52	2	26			
	33	3	11			
	208	합계	160			
합계	1,669	1	1,669	1,434	412	531
	414	2	207			
	267	3	89			
	2,350	합계	1,965			

2. 자료 수집 방법

이 글의 분석 대상인 12년간 참여연대의 2,350명 임원직을 점유했던 531명의 인물들의 명단은 정기총회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이들의 신상 정보는 1차적으로 정기총회 자료집에 간단히 명시되어 있는 직업을 기초로 하였고, 이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각종 언론사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신상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당 인물의 직업, 생년월일(나이), 출생지, 학력(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경력(소속 단체, 공직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각각의 조사 변수와 정보 수집 방법, 수집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직업 : 임원의 직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와 참여연대 정기총회 자료집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모두 416명이었다. 416명의 직업은 학계, 법조계, 일반 시민, 예술문화계, 종교계, 기업경영, 시민운동, 언론계, 의료계, 정치계 모두 10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각 인물의 직업을 분류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참여연대 임원으로 활동할 당시의 직업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기 어려운 인물의 경우,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분야로 소속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었다.

▶ 출생지역 및 출생년도 : 참여연대 임원의 출생지역과 출생년도를 확인하는 작업은 각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특히 교수 및 연구자를 포함하는 학계 인사의 경우에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자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출생지역과 출생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각각 274명 및 309명이었다. 출생지역은 시도별 구분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분석과정에서는 편의상 서울·경기, 강원, 영남(경상남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함), 호남(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포함), 충청(충청남북도, 대전광역시 포함), 기타(제주, 해외, 이북 포함) 6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 출신 고등학교 및 출신 대학교 : 임원들의 출신 고등학교와 출신 대학교는 각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특히 교수 및 연구자를 포함하는 학계 인사의 경우에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자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출신 고등학교와 출신 대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각각 170명 및 309명이었다.

▶ 경력 : 각 인물의 경력은 각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특히 교수 및 연구자를 포함한 학계 인사의 경우에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자정보를 이용하였다. 또한 일부 공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서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경력들을 가진 인물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경력을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경력에는 크게 개인이 소속한 단체와 공직을 수행한 경력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우선 개인이 소속된 단체는 넓은 의미의 각종 시민·사회단체, 언론관련 단체, 예술문화단체, 법조단체, 기업, 학술단체, 의료단체, 종교단체, 정당, 기타라는 10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 범주의 경우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는 물론 다양한 정치·대북관련 단체와 사회인권복지관련 단체에 대한 소속 여부가 조사되었다. 그 결과 참여연대 임원들은 모두 105개의 시민·사회단체에 소속하여 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¹⁾

언론관련 단체의 경우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물론 고정필진이나 이사직을 맡았던 경력들도 추적하였다. 또한 언론관련 각종 협회와 단체 역시 이 범주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44개의 언론관련 단체에 참여연대 임원들이 소속한 것으로 나타났다.²⁾

1) 시민·사회단체의 범주에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8), 환경운동연합(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5), 전국교직원노동조합(4), 사회복지공동모금회(4), 민주노총(3), YMCA(3), 아름다운재단가게(5), 한국의회발전연구회(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3),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3),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3), 한국인권재단(3), 남북민간교류협의회(2),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2),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2), 국제민주연대(2), 대안연대(2), 한국비정규노동센터(2),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2), 한국자원봉사단체연합회(2), 환경재단(2), 한국여성단체연합(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 충선시민연대(3), 6·15 실천을 위한 남측학술특위(1),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해외 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1), 공정선거 민주개혁 국민위원회(1),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1), 국민참여연대(1), 김대중납치사건 진상규명시민모임(1), 김준배추모사업회(1), 노근리사건 대책단(1), 도시연대(1), 물같이연대(1), 민족통일추진회(1), 민족화해운동연합(1), 민주개혁국민연합(1), 민주공제회(1), 민주유공자장학재단(1), 민주화운동자료관 추진위원회(1), 민주회복국민회의(1), 민주중주운동협의회(1), 반핵국민행동(1), 반핵평화운동연합(1), 부천서성고문사건대책여성단체연합회(1), 사노맹(1), 서울지하철공사 노조(1), 자유총연맹 민주시민 교육센터(1), 전노협(1), 전북여성단체연합(1), 청년개혁연대(1),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회의(1), 평화통일 민족회의(1), 한국반공연맹(1), 한국유권자운동연합(1), 행정개혁시민연합(1),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1), 노령화사회 회담재단(1), 녹색교통운동(1), 녹색서울시민위원회(1), 반부패 국민연대 국제 투명성기구 한국본부(1), 새금강생명평화연대(1), 수도권주민자치회(1),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자문단(1), 아름다운 사회(1), 에너지절약시민연대(1),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보호원(1),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1),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1), 원전직업병관리재단(1),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1), 일하는 사람들의 토론모임(1), 재단법인 애린복지재단(1), 재단법인 연구및치료 목적 난자기증을 지원하기 위한 모임(1), 제주사회문제협의회(1),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1), 투명성포럼(1), 푸른사회연대(1), 풀무원공동체(1),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1), 한국교통장애인협회(1), 한국복지재단(1), 한국성폭력상담소(1), 한국여성단체협의회(1), 한국여성민우회(1), 한국여성재단(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 함석헌기념사업회(1), 홀트양자회(1), 환경농업단체연합회(1), 환경정의시민연대(1), 환경정의포럼(1), 월드비전(1), 유니세프 친선대사(1), 유엔 인권보호증진소위원회(1), 유엔 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1), 인권고등 관부관실 아태지부(1), 인권운동사랑방(1), 재단법인 영도육영회(1), 정의교육개선연합(1), 정의로운사회를위한시민운동협의회(1)가 포함되며, 이는 총 105개 단체 162개의 경력에 관한 자료다(괄호 안의 수는 해당 단체에 소속된 참여연대 임원의 수이다.).

2) 언론관련 단체의 범주에는 KBS(9), MBC(5), SBS(1), EBS(2), CBS(2), 기독교 방송(1), 평화신문·방송(1), 시민방송(2), 한국경제TV(1), 한겨레신문(16), 한겨레 통일문화재단(3), 중앙일보(6), 한국일보(7), 경향신문(5), 국민일보(1), 동아일보(5), 문화일보(1), 내일신문(2), 서울신문(2), 대한매일(1), 세계일보(2), 미디어 오늘(1), 서울경제신문(1), 매일경제신문(1), 스포츠 서울(1), 시사저널(1), 교수신문(1), 여성동아(1), 노동일보(1), 월간 말지(4), 계간 열린지성(1), 당대(1), 창작과비평(2), 프레시안(3), 머니투데이(1),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회(4), 언론개혁시민연대(6), 서울언론재단(1),

예술문화단체에는 문학, 음악, 미술, 영화와 관련된 모든 협회와 단체를 포함시켜 조사하였고, 그 결과 20개의 예술문화단체에 참여연대 임원이 소속되어 활동하였음을 추적할 수 있었다³⁾.

법조단체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기수와 근무경력에 있는 법무법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사법연수원 기수가 아닌 사법고시 회수로 약력이 표기된 경우 모두 해당 연도를 환산하여 사법연수원 기수로 기준을 통일시켰다. 또한 직능단체라 할 수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 범주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두 50개의 법조 단체 및 법조인 집단에 참여연대 임원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기업의 범주에서는 참여연대 임원이 운영하거나 소속한 기업은 물론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있던 기업에 대한 경력까지 포함하여 추적하였다. 그 결과 참여연대 임원이 소속 혹은 관여하였던 기업은 모두 44개로 나타났다.⁵⁾

학술단체의 경우 연구소와 학회를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 참여연대 임원들이 소속된 단체는 모두 38개로 나타났다.⁶⁾ 학술단체와는 별도로, 학계인사의 경우에 한해서는 현재 재직중

관훈클럽(1), 서울외신클럽(1), 한국방송작가협회(1), 한국방송협회(1), 한국성우협회(1), 한국여성언론인연합(1) 이 포함되며, 이는 총 44개 단체 111개의 경력에 관한 자료다.

3) 예술문화단체의 범주에는 민족문학작가회의(7),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회(3),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2), 광주시립미술관(1), 국립민속박물관(1), 대인지뢰예술가모임(1), 문화네트워크(1), 문화산업포럼(1), 민족미술협의회(1),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1), 시민문화네트워크(1), 영화진흥위원회(1), 예술원문학분과회원(1), 우리말살리는 겨레모임(1), 전통문화연구회(1), 한국 문학평론가 협회(1), 한국비디오저널리스트협회(1), 경기도 국립국악단(1), 한국영화인회의(1), 한국출판인회의(1) 가 포함되며, 이는 총 20개 단체 29개의 경력에 관한 자료다.

4) 법조단체의 범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15), 법무법인 한결(5), 법무법인 덕수(5), 김&장 법률사무소(4), 법무법인 우인(2), 나라종합법률사무소(2), 법무법인 세길(2), 남상철법률사무소(1), 명신평법률사무소(1), 박재승법률사무소(1), 법무법인 광장(1), 법무법인 두우(1), 법무법인 로고스(1), 법무법인 명인(1), 법무법인 산하(1), 법무법인 에이스(1), 법무법인 이안(1), 법무법인 정민(1), 법무법인 정평(1), 법무법인 정현(1), 법무법인 지평(1), 법무법인 천지인(1), 법무법인 아람(1), 부평종합법률사무소(1), 성종규법률사무소(1), 송두환법률사무소(1), 유중원법률사무소(1), 임통일법률사무소(1), 장백합동법률사무소(1), 필동합동법률사무소(1), 사법연수원 3기(4), 8기(1), 11기(2), 12기(2), 13기(3), 14기(3), 15기(5), 17기(1), 18기(2), 20기(1), 21기(1), 22기(1), 27기(2), 28기(2), 29기(1), 30기(3), 31기(2), 사법고시 8회(1), 10회(1), 11회(1) 가 포함되며, 이는 총 50개 단체 97개의 경력에 관한 자료다.

5) 기업의 범주에는 포스코/청암재단(5), 국민은행 사외이사(3), SK 사외이사(1), 현대투자신탁 사외이사(1), 중소기업은행 고문변호사(1),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1), LG칼텍스 사외이사(1), E1 사외이사(1), 한국갤럽(2), 외환은행 사외이사(2), 바른경제동인회(2), 삼성(1), 한국담배인삼공사(1), 옥션(1), 미래 MNB(1), 학교재(1), 출판사 과학세대(1), 김영사(1), 아르케출판사(1), 나남출판사(1), 열린책들(1), 도서출판 문(1), 도서출판 좋은세상(1), 출판사 평민사(1), 나눔기획(1), 넷피아(1), 아원디아아(1), 한우물(1), KSS해운(1), 동천개발(1), 수암건설(1),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1), 한글과컴퓨터(1), 미디어리서치(1), LMG 다음기획(1), 유니코리아 문예투자(1), 유엔파트너즈(1), J&A(1), 이니시스(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벤처기업위원회(1), 한국인터넷기업협회(1), 전국여성경제인협회(1), 한불상공회의소(1), 청명문화재단(1) 이 포함되며, 이는 총 44개 단체 53개의 경력에 관한 자료다.

6) 학술단체의 범주에는 역사문제연구소(7), 민족문제연구소(3), 노동사회연구소(2), 한국정당정치연구소(2), 시민환경연구소(2), 기업윤리연구소(1), 노동정책연구소(1), 민족문학사연구소(1), 사회운동연구소(1), 아시아경제윤리연구소(1), 제주 4·3연구소(1),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1), 한국문학연구소(1), 한국사회문제연구소(1), 한민족평화연구소(1), 환경사회정책연구소(1), 환경정책연구소(1), 나눔문화연구소(1), 홀살림연구소(1), 환경정의연구소(1), 한국정신문화연구원(3), 국가기록연구원(1), 민족통일연구원(1),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1), 사회발전연구원(1), 한국사학문화연구원(1), 한국천문연구원(1), 학술단체협의회(2), 통일경제연구원(1), 산업노동학회(1), 한국노사관계학회(1), 한국공법학회(1), 한국대중음악학회(1), 한국산업사회학회(1), 한국감사협회(1), 한국형사법학회(1), 한국부패학회(1), 나라정책연구원(1) 가 포함되며, 이는 총 38개 단체 52개의 경력에 관한 자료다.

인 대학을 조사하였으며, 이는 모두 51개로 나타났다.

의료단체의 범주에는 참여연대 임원이 근무하는 병원은 물론 협의회나 학회 등과 같은 직능 단체까지 포함시켰으며, 모두 16개로 조사되었다.⁷⁾

종교단체의 경우 각 종교별로 개인이 소속된 교회, 성당, 사찰 등은 물론 종교인들만으로 구성된 연구원과 협의회 및 위원회 등을 포함하였으며, 모두 36개로 나타났다.⁸⁾

마지막으로 정당의 경우는 참여연대 임원이 소속된 바 있는 정당을 모두 조사하였는데, 이 경우 개인들이 정당의 정확한 명칭을 표기하지 않아 상당한 혼선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동일한 민주당이라고 소속을 밝혀도 이 민주당이 현재의 민주당인지 혹은 91년 9월에 창당한 민주당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선을 막기 위해 각 정당의 창당 시기를 기준으로 유사한 이름의 정당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참여연대 임원이 정당활동을 한 기간을 고려하여 각 시기에 맞는 정당명으로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 참여연대 임원이 소속된 바 있는 정당은 모두 16개로 나타났다.⁹⁾

앞서 구분한 범주로 분류하기 어려운 단체들은 기타의 범주로 묶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단체는 모두 15개이다.¹⁰⁾

공직의 경우 청와대 조직도¹¹⁾와 정부 조직도¹²⁾ 및 정부의 예산편성 관련 자료¹³⁾를 참고하여, 공직 소속별로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 각 부처, 입법기구, 사법기구, 독립기구, 지방정

7) 의료단체의 범주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6),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3), 보건의료단체연합(2), 건강연대(1), 대한노인병학회(1), 대한의사학회(1), 대한의사협회(1), 녹색병원(1), 보건단체대표자회의(1), 보훈병원(1), 한국보건산업진흥원(1), 대한적십자사(1), 대한치과의사협회(1), 한국금연운동협의회(1),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1),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1)가 포함되며, 이는 총 16개 단체 24개의 경력에 관한 자료다.

8) 종교단체의 범주에는 대한불교 조계종(5),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2), 천주교 인권위원회(2), 천주교 사회운동협의회(1),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1), 가톨릭 농민회(1), 가톨릭 문화연구원(1),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1), 성공회(1),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2), 기독교 사회운동연합(2), 기독교 교회협의회(2), 기독교 대한성경교회(1), 기독교 대한감리회(1), 기독교 윤리실천협의회(1), 아시아기독교협의회(1), 기독교 환경운동연합(1), 원불교(2), 불교정토구현 전국승가회(1), 실천불교전국승가회(1), 명동교회(1), 갈현교회(1), 새민족 교회(1), 일산은혜교회(1), 한백교회(1), 제기동 성당(1), 천지보은회(1), 해인사(1), 능인선원(1), 금강정사(1), 금선사(1), 한국크리스찬 아카데미(1),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1), 민족의화해와통일을위한 종교인협의회(1), 종교환경회의(1), 생명과평화의길(1)이 포함되며, 이는 총 36개 단체 46개의 경력에 관한 자료다.

9) 한국의 정당사를 조사하여 각 시기별로 혼동될 수 있는 당명을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이 16개의 정당에 대한 경력이 조사되었다. 괄호안의 숫자는 창당일지이다. 한국국민당(81.1), 평민당(87.11), 신민주연합당(91.4), 민주당(91.9), 자민련(95.5), 국민회의(95.9), 개혁신당(95.11), 통합민주당(95.12), 신한국당(96.2), 국민신당(97.10), 한나라당(97.11), 새천년민주당(00.1), 민주노동당(00.5), 국민통합21(02.11), 열린우리당(03.11), 무소속.

10) 기타의 범주에는 남북강원도협력협회, 관악포럼, 71 동지회, 강경대군 치사사건 진상조사단장,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교정원 문화부,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사무직노동자네트워크, 민족혼국토지킴이회, 아름다운사람들, 움직이는 학교, 제삼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살림, 한얼농장이 포함되며, 이는 총 15개 단체 15개의 경력에 관한 자료다.

11) [http : //www.president.go.kr/cwd/kr/about/organization/cwd.html](http://www.president.go.kr/cwd/kr/about/organization/cwd.html)

12) [http : //www.president.go.kr/cwd/kr/about/organization/government.html](http://www.president.go.kr/cwd/kr/about/organization/government.html)

13) 기획예산처, 2004, 『2004년 예산개요 참고자료』.

대한민국정부, 2003, 『2004년도 예산』(2003. 12. 30 제244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 의결).

박영희 외, 2005, 『공기업론』, 다산출판사(제3판).

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대통령 산하기구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 및 대통령 비서실 등과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참여연대 임원이 맡았던 대통령 산하기구 공직은 모두 121개로 조사되었다. 국무총리 산하기구에는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등과 국무총리 산하의 각종 위원회를 포함시켰다. 그 결과 참여연대 임원이 맡았던 국무총리 산하기구 공직은 모두 35개로 조사되었다. 정부 각 부처 산하 공직에는 18개부 18청에 속한 공직은 물론, 각 부처에 속한 위원회를 모두 포함시켰다. 그 결과 모두 88개의 각 부처 산하 공직에 관한 경력을 조사할 수 있었다. 입법기구 산하 공직에는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산하 기구와 위원회에서 맡았던 공직이 포함되며, 참여연대 임원이 맡았던 입법기구 산하 공직은 모두 12개로 나타났다. 사법기구 산하 공직은 대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맡았던 공직을 말하며, 참여연대 임원이 맡았던 사법기구 산하 공직은 모두 5개로 나타났다. 독립기구 산하 공직은 헌법이나 법률로써 지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기관은 물론 그 산하에서 활동하는 각종 위원회를 포함시켰다. 그 결과 모두 42개의 경력이 조사되었다. 또한 각 지방정부에 속하는 공직들은 지방정부 범주로 묶었으며, 여기에 포함되는 공직은 모두 10개이다.

▶ 참여연대 직책 및 기간 : 참여연대 정기총회 자료집을 바탕으로 531명의 인물들이 참여연대에서 맡았던 직책과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을 각각 조사하였다. 먼저 직책의 경우 앞서 설명한 임원의 범주에 따라 공동대표, 감사,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집행위원, 정책위원, 사무처장단 순으로 각각 1부터 8까지의 고유값을 주어 표기하였다. 또한 참여연대에서 임원들이 활동한 기간을 연도별로 조사하였다. 이 결과는 <부록 4>에 정리되어 있다.

3. 자료 분석 방법

앞서 설명한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첫 번째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이고, 두 번째는 'UCINET 6'을 이용한 연결망 분석이다. 531명에 대해 수집한 정보들 가운데 조사대상의 속성으로 구성된 데이터들은 SPSS 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의 속성을 통해 조사대상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은 'UCINET 6'이라는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행위자들간의 연결망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하위집단(Subgroup), 중앙성(Centrality) 등의 지표들을 수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보여줌으로써 네트워크 분석에서 널리 쓰이는 프로그램이다.

III. 참여연대 임원의 기본 통계

1. 직 업

전체 531명의 임원 가운데 직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모두 416명이었다. 이들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교수 및 연구자를 포함한 학계 인물이 모두 170명(4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조계 인사(56명, 13.5%), 일반 시민¹⁴⁾(44명, 10.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업별 현황은 <표 3-1>과 같다. <표 3-1>이 보여주는 참여연대의 임원진의 직업별 구성을 <표 3-2>에 나타난 한국 중앙 51개 NGO의 지식인 참여유형과 구성비와 비교해 보자. 물론 두 표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표 3-2>는 일반 시민을 제외한 지식인의 참여유형만 다루고 있으며, 두 자료의 세부적인 분류의 기준 역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표 3-2>는 실무활동을 맡는 간사들을 포함한 ‘집행기구’까지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의 분석대상인 참여연대 임원들의 직업구성과는 당연히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표 3-1> 참여연대 임원진의 직업별 현황

직업분류	인원(명)	%(N=531)	%(N=416)
학계	170	32.0	40.9
법조계	56	10.5	13.5
일반 시민	44	8.3	10.6
예술문화	29	5.5	7.0
종교계	28	5.3	6.7
기업경영	27	5.1	6.5
시민운동	26	4.9	6.3
언론	19	3.6	4.6
의료	11	2.1	2.6
정치	6	1.1	1.4
미수집	115	21.7	-
합계	531	100.0	100.0

그러므로 <표 3-2>에서 집행기구 범주를 제외한 대표기구와 자문기구의 구성과 참여연대의 구성을 비교하는 것이 참여연대 임원들의 직업분포 특징을 더욱 잘 드러내 준다.

먼저 참여연대 임원 가운데 시민운동가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 임원 가운데 활동가의 비중은 6.3%인데, 이는 51개 중앙 NGO의 대표기구

14) ‘일반 시민’이라는 범주는 직업적 범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보 수집 결과, 특정한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회사원의 경우나 주부, 학생, 일반 회원 등으로만 신상 정보가 나와 있는 경우를 분류하기 위해 이들을 일반 시민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켰다.

(17.3%)나 자문기구(14.7%) 모두와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치이다. 일반 시민의 참여 또한 전체 임원 가운데 10.6%에 불과하며, 이는 51개 중앙 NGO의 대표기구(25.3%)나 자문기구(20.2%)에서의 일반 시민의 참여 정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반면 참여연대 임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집단은 법조계와 언론계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임원 가운데 법조계 인물은 13.5%로, 51개 NGO의 대표기구(5.8%)와 자문기구(3.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였다. 언론계 인물의 경우, 참여연대는 4.6%, 51개 NGO의 대표기구와 자문기구는 1.2%, 2.9%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참여연대 임원 가운데 법조계와 언론계 인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시민단체들보다 높은 반면, 활동가나 일반 시민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표 3-2> 한국 중앙 51개 NGO의 지식인 참여유형과 구성비

구분	대표기구	자문기구	집행기구	전체(%)
활동가	71(17.3%)	102(14.7%)	281(98.9%)	454(32.7%)
교육자	136(33.1%)	291(42.1%)	2(0.7%)	429(30.9%)
종교인	20(4.9%)	26(3.8%)	1(0.4%)	47(3.4%)
법조인	24(5.8%)	26(3.8%)	1(0.4%)	51(3.7%)
예술인	9(2.2%)	46(6.6%)	0(0.0%)	55(4.0%)
언론인	5(1.2%)	20(2.9%)	0(0.0%)	25(1.8%)
의료인	20(4.9%)	17(2.5%)	0(0.0%)	37(2.7%)
회계사	21(5.1%)	18(2.6%)	0(0.0%)	39(2.8%)
건축사	1(0.2%)	6(0.9%)	0(0.0%)	7(0.5%)
일반인	104(25.3%)	140(20.2%)	0(0.0%)	244(17.6%)
전체	411(100%)	692(100%)	284(100%)	1388(100%)

자료 : 주성수, 2002.

2. 출생지역

전체 531명의 임원진 가운데 274명의 출생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도별로는 서울 출신이 48명(18.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상남도(44명, 17.2%), 전라남도(35명, 13.7%) 순이다. 또한 권역을 확대하여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영남지역(77명, 30.1%)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경기(65명, 25.4%), 호남(57명, 22.3%)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분포는 <표 3-3>과 같다.

<표 3-3> 참여연대 임원진의 출생 지역별 분포

출생지		인원(%, N=531)	인원(%, N=274)	인원(%, N=274)
서울·경기	서울	48(9.04)	48(18.8)	65(25.4)
	경기도	17(3.20)	17(6.6)	
강원	강원도	12(2.26)	12(4.7)	12(4.7)
충청	충청남도	21(3.95)	21(8.2)	30(11.7)
	충청북도	9(1.69)	9(3.5)	
호남	전라남도	35(6.59)	35(13.7)	57(22.3)
	전라북도	22(4.14)	22(8.6)	
영남	경상남도	44(8.29)	44(17.2)	77(30.1)
	경상북도	33(6.21)	33(12.9)	
기타	제주	2(0.38)	2(0.8)	15(5.9)
	이북	12(2.26)	12(4.7)	
	해외	1(0.19)	1(0.4)	
미수집		257	-	-
전체		531(100.0)	274(100.0)	274(100.0)

<표 3-4> 2000년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서울·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총계
21,258,062	1,484,536	4,668,992	5,232,474	12,828,684	512,541	45,985,289
46.23	3.23	10.15	11.38	27.90	1.11	100.0(%)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참여연대 임원의 출생 지역 구성을 <표 3-4>의 한국사회 전체의 인구구성과 비교하면 참여연대에 참여하는 임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 출신이 많고 또 적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 임원의 출생지역별 구성은 강원, 충청, 영남권에서는 전체 인구구성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서울·경기의 경우 전국 비율보다 반 정도 낮으며, 호남의 경우 전국 비율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참여연대 임원 가운데 서울·경기지역 출신 인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호남지역 출신 인물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출생 지역에 대한 정보이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와 불일치할 수도 있다.

3. 연 령

531명의 전체 임원 가운데 출생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309명이었다. 연령의 경우 실제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인물의 참여연대 임원 활동 당시의 연령을 조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거나 이러한 조사 방법은 각 인물의 활동 시기상의 편차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한 인물이 시차를 두고 참여연대 임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2006년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 초반(75, 24.27%), 40대 후반(60, 19.42%), 50대 후반(48, 15.53%)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현황은 <표 3-5>와 같다.

<표 3-5> 참여연대 임원의 연령별 분포

연령대(만나이)		인원(명)	%(N=513)	%(N=309)
70세 이상		27	5.08	8.74
60대	65-69세	42	7.91	13.59
	60-64세	30	5.65	9.71
50대	54-59세	48	9.04	15.53
	50-55세	75	14.12	24.27
40대	45-49세	60	11.30	19.42
	40-44세	21	3.95	6.80
30대	35-39세	5	0.94	1.62
	30-34세	1	0.19	0.32
미수집		222	41.81	-
전 체		531	100.0	100.0

4. 출신 고등학교

531명의 전체 임원 가운데, 각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출신 고등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모두 170명이었다. 이들의 출신 고등학교별 분포를 보면, 경기고가 25명(14.7%)으로 월등히 많고, 다음이 서울고 9명(5.3%), 부산고 8명(4.7%), 전주고 6명(3.5%) 순이다.

<표 3-6> 참여연대 임원의 출신 고등학교별 분포(상위 4개 고교)

총계	경기고	서울고	부산고	전주고
170(명)	27	9	8	6
100.0(%)	14.7	5.3	4.7	3.5

주 : %는 출신 고등학교를 확인할 수 있었던 170명에 대한 %임.

참여연대 임원의 출신 고등학교 분포를 <표 3-8>의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 고등학교

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된다. 먼저 참여연대 임원의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수집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두 집단의 유효 %만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자. 두 집단 모두 경기고 출신의 인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상위 고등학교의 구성도 유사성을 보인다. 상위 4개 고교의 경우 경기고, 서울고 2개의 학교가 중복되며, 상위 6개 고교의 경우 경기고, 서울고, 부산고 3개의 학교가 중복된다. 흥미로운 점은 참여연대의 경우 경기고 출신 인물의 비중(14.7%)이 삼성(11.2%)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3-7> 참여연대 임원의 출신 고등학교별 분포

출신 고교	인원(명)	%(N=531)	%(N=170)
경기고	25	4.7	14.7
서울고	9	1.7	5.3
부산고	8	1.5	4.7
전주고	6	1.1	3.5
경동고	5	0.9	2.9
경북고	5	0.9	2.9
광주일고	5	0.9	2.9
경북고	4	0.8	2.4
광주고	4	0.8	2.4
대전고	4	0.8	2.4
용산고	4	0.8	2.4
중앙고	4	0.8	2.4
경기여고	3	0.6	1.8
경북대 사대부고	3	0.6	1.8
서울 사대부고	3	0.6	1.8
성동고	3	0.6	1.8
제물포고	3	0.6	1.8
진주고	3	0.6	1.8
검정고시	3	(0.6)	1.8
계성고	2	0.4	1.2
남성고	2	0.4	1.2
보성고	2	0.4	1.2
청주고	2	0.4	1.2
해운대고	2	0.4	1.2
기타*	56	10.5	32.9
미수집	361	70.0	-
전체	531	100.0	100.0

주 : 기타*는 출신 임원이 1명인 고등학교들임.

<표 3-8>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 고등학교별 분포

출신 고교	인원(명)	비중(%)
경기고	27	11.2(9.7)
경북고	18	7.5(6.5)
서울고	16	6.6(5.8)
경북고	10	4.1(3.6)
부산고	8	3.3(2.9)
대전고	8	3.3(2.9)
서울대사대부고	7	2.9(2.5)
경기여고	5	2.1(1.8)
경남고	5	2.1(1.8)
중앙고	5	2.1(1.8)
경북대사대부속고	4	1.7(1.4)
광주고	4	1.7(1.4)
마산고	4	1.7(1.4)
보성고	4	1.7(1.4)
전주고	4	1.7(1.4)
청주고	4	1.7(1.4)
기타	108	44.8(38.8)
미파악	37	- (13.3)
전체	278	100.0(100.0)

주 : () 안은 전체 278명 대비 비중임.
자료 : 참여연대, 2005, 「삼성보고서」.

5. 출신 대학교

전체 531명의 임원 가운데 모두 309명의 출신 대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신 대학교는 서울대 152명(49.2%), 고려대 31명(10.0%), 연세대 25명(8.1%) 순이다. 자세한 대학별 분포는 <표 3-10>과 같다. 특히 상위 5개 대학의 구성을 보여주는 <표 3-9>에서 보듯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 5개 대학 출신의 임원들이 전체 309명 임원진의 74.1%(전체 531명 가운데 43.1%)를 차지하고 있다.

<표 3-9> 참여연대 임원의 출신 대학별 분포(상위 5개 대학)

총계	서울	고려	연세	성균관	이화여대
309(명)	152	31	25	11	10
100.0(%)	49.2	10.0	8.1	3.6	3.2

주 : %는 출신 대학교를 확인할 수 있었던 309명에 대한 %임.

<표 3-10> 참여연대 임원의 출신 대학별 분포

대학교	인원(명)	%(N=531)	%(N=309)
서울대	152	28.6	49.2
고려대	31	5.8	10.0
연세대	25	4.7	8.1
성균관대	11	2.1	3.6
이화여대	10	1.9	3.2
동국대	7	1.3	2.3
한신대	6	1.1	1.9
외국 대학	5	1.0	1.6
중앙대	5	1.0	1.6
경희대	5	1.0	1.6
가톨릭대	4	0.8	1.3
전북대	3	0.6	1.0
명지대	3	0.6	1.0
숙명여대	3	0.6	1.0
원광대	3	0.6	1.0
전남대	3	0.6	1.0
인하대	3	0.6	1.0
조선대	2	0.4	0.6
한국외국어대	2	0.4	0.6
한양대	2	0.4	0.6
홍익대	2	0.4	0.6
서울신학대	2	0.4	0.6
부산대	2	0.4	0.6
서강대	2	0.4	0.6
국민대	2	0.4	0.6
기타*	14	2.6	4.5
미수집	222	41.8	-
전체	531	100.0	100.0

주 : 기타*는 출신 임원이 1명인 대학교들임.

<표 3-11>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 대학별 분포

대학교	인원(명)	비중(%)
서울대	159	58.5(57.2)
고려대	23	8.5(8.3)
연세대	19	7.0(6.8)
성균관대	9	3.3(3.2)
육사	5	1.8(1.8)
이화여대	5	1.8(1.8)
경북대	4	1.5(1.4)
서강대	4	1.5(1.4)
부산대	4	1.5(1.4)
건국대	3	1.1(1.1)
중앙대	3	1.1(1.1)
한양대	3	1.1(1.1)
숙명여대	2	0.7(0.7)
명지대	2	0.7(0.7)
기타	27	9.9(9.7)
미파악	6	- (2.2)
전체	278	100.0(100.0)

주 : () 안은 전체 278명 대비 비중임.
 자료 : 참여연대, 2005, 「삼성보고서」.

참여연대 임원의 출신 대학 분포를 <표 3-11>의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대학 분포와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서울대 출신의 경우 삼성이 참여연대보다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참여연대의 상위 5개 대학과 삼성의 상위 6개 대학의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집단의 6개 상위 대학 출신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참여연대 76.4%, 삼성 80.9%로, 두 집단 모두 특정 엘리트 대학 출신의 인물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6. 경 력

각 인물의 경력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소속단체에 대한 부분이다. 참여연대 임원이 참여한 경력이 조사된 단체는 시민·사회단체 105개, 언론단체 44개, 예술문화단체 20개, 법조단체 50개, 기업 44개, 학술단체 38개, 의료단체 16개, 종교단체 36개, 재직대학 51개, 정당 16개, 기타 15개로 모두 435개로 나타났다. 이 모든 경력에

대한 구체적 단체와 인물에 대한 자료는 <부록 5>에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는 공직 경력에 대한 부분이다. 참여연대 임원의 경력에서 확인된 공직들은 대통령 산하기구 121개, 국무총리 산하기구 35개, 각 부처 산하기구 88개, 입법부 산하기구 12개, 사법기구 산하기구 5개, 독립기구 산하기구 42개, 지방정부 10개 등 모두 313개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공직을 맡은 인물의 수는 중복을 제외하여 150명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기술과 분석은 6장에서 하기로 한다.

7. 참여연대 임원의 활동 기간과 직책 수

참여연대의 정기총회 자료집을 통해 파악한 531명 모든 임원들의 활동년수와 직책 점유 현황을 분석 해보자. 먼저 <표 3-12>는 개인들이 참여연대의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을 보여 준다. 최소값 1은 1년만 활동한 임원을 의미하며, 최대값 12는 참여연대의 창립 시기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인물들을 말한다. 특히 12년 동안 계속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4명으로, 손혁재, 안경환, 양길승, 유명종이 이에 해당한다. 전체 임원 531명의 평균 활동기간은 3.70년이다.

<표 3-12> 참여연대 임원의 활동년수 분포표

활동년수	빈도	%	해당 인물
1	136	25.6	*
2	102	19.2	*
3	54	10.2	*
4	81	15.3	*
5	31	5.8	*
6	44	8.3	*
7	30	5.6	*
8	15	2.8	*
9	9	1.7	곽진, 김창남, 김호기, 신영복, 유종원, 이신행, 임현영, 조흥식, 차병직
10	12	2.3	김창국, 김창준, 도정일, 명진, 박상중, 박원순, 박은정, 유팔무, 이삼열, 이정옥, 한면희, 한인섭
11	13	2.4	김승균, 김용태, 김준목, 김중배, 박석운, 박성준, 백낙청, 법안, 송두환, 오재식, 이대훈, 조희연, 주종환
12	4	0.8	손혁재, 안경환, 양길승, 유명종
합계	531	100.0	
활동년수 평균	3.70		

주 : * 활동년수 1년부터 8년까지의 해당 인물은 <부록 4>를 참조.

다음 <표 3-13>은 참여연대 임원이 맡은 총직책수의 빈도를 정리한 표이다. 최소값 1 즉 한 사람이 한 직책을 맡은 경우는 120번이고, 최대값 26 즉 한 사람이 12년 동안 총 26개의 직책을 맡은 경우는 2번(박상증, 손혁재)있다. 이 값의 평균은 4.43으로 12년 동안 1인당 평균 4.43개의 직책을 점유했음을 보여준다.

<표 3-13> 참여연대 임원의 총직책수 분포표

총직책수	빈도	%	해당 인물
1	120	22.6	-
2	101	19.0	-
3	60	11.3	-
4	78	14.7	-
5	20	3.8	-
6	43	8.1	-
7	29	5.5	-
8	17	3.2	-
9	10	1.9	-
10	9	1.7	-
11	15	2.8	-
12	7	1.3	-
13	1	0.2	양윤재
14	1	0.2	장유식
15	2	0.4	박영선, 임현영
16	3	0.6	김기식, 김남근, 김호기
17	4	0.8	박은정, 안경환, 오재식, 한인섭
18	3	0.6	김창국, 이대훈, 진영종
19	1	0.2	양길승
20	1	0.2	유명종
22	1	0.2	차병직
23	2	0.4	김중배, 박원순
24	1	0.2	조희연
26	2	0.4	박상증, 손혁재
합계	531	100.0	
총직책수 평균	4.43		

<표 3-14> 참여연대 임원의 연평균직책수 분포표

연평균 직책수	빈도	%	해당 인물
1.00	431	81.2	-
1.09	1	0.2	주종환
1.10	2	0.4	김창준, 이삼열
1.11	1	0.2	유종원
1.13	1	0.2	기우봉
1.14	1	0.2	정용덕
1.17	1	0.2	박흥식
1.20	3	0.6	김종찬, 명진, 이화숙
연평균 직책수	빈도	%	해당 인물
1.25	3	0.6	김철준, 윤태범, 채수일
1.29	2	0.4	김연명, 홍성우
1.33	6	1.1	이신행, 조흥식, 김영태, 박연철, 박찬욱, 황인성
1.38	1	0.2	박호성
1.40	3	0.6	권진관, 신윤희, 임주일
1.42	1	0.2	안경환
1.50	11*	2.1	
1.55	1	0.2	오재식
1.57	1	0.2	김대환
1.58	1	0.2	양길승
1.60	1	0.2	임정근
1.64	1	0.2	이대훈
1.67	3	0.6	맹행일, 유명종, 임현영
1.70	2	0.4	박은정, 한인섭
1.71	1	0.2	이은영
1.75	2	0.4	김환석, 성종규
1.78	1	0.2	김호기
1.80	4	0.8	김동춘, 김창국, 안영도, 장하성
1.83	1	0.2	김상조
1.86	1	0.2	양윤재
2.00	25*	4.7	
2.09	1	0.2	김중배
2.17	1	0.2	손혁재
2.18	1	0.2	조희연
2.30	1	0.2	박원순
2.44	1	0.2	차병직
2.57	1	0.2	진영종
2.60	1	0.2	박상중
2.67	2	0.4	김기식, 김남근
2.75	2	0.4	윤상철, 홍성태
2.80	1	0.2	장유식
3.00	6	1.1	김민영, 박영선, 박원석, 이재명, 이태호, 최영도
합계	531	100.0	
연평균 직책수 평균	1.15		

주 : 11* - 평균직책수가 1.50인 인물은 박진도, 이상희, 조국, 김영철, 김유선, 김형완, 김형태, 심현천, 이상훈, 최민섭, 한찬욱으로 모두 11명이다.

25* - 평균직책수가 2.00인 인물은 이선종, 최영태, 김수진, 하승수, 박순성, 임종대, 남상철, 이현욱, 김균, 이병천, 이영환, 최은순, 한상희, 강경선, 강원택, 김동광, 김병섭, 김종해, 문준식, 송호창, 윤찬영, 이

광택, 이영희, 최현, 하태권으로 모두 25명이다.

그러나 활동년수와 총직책수만으로 참여연대 임원들의 전반적인 직위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짧은 기간 동안 활동을 한 임원이 여러 직책을 점유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 인물의 총직책수를 총활동년수로 나눈 연평균직책수를 계산하였다. 이에 대한 빈도분포는 <표 3-14>와 같다. 연평균직책수의 전체 평균은 1.15이며, 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3.00이다. 특히 최대값 3.00을 나타낸 이들은 김민영, 박영선, 박원석, 이재명, 이태호, 최영도 6명으로 이들은 임원 활동기간에 모두 세 개의 임원 직책을 집중적으로 겸직했다.

IV. 참여연대의 지배구조

1. 회원 참여율

참여연대의 지배구조 문제를 깊고 넘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임원 가운데 일반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할 수 있다. 회원의 수나 회비 납부를 통한 재정 자립도를 중요한 지배구조의 척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박영선, 2003) 이러한 기준들은 참여연대의 주요 정책이나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도에 일반 시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참여연대의 정책과 운동 방향들은 조직도에서 보듯이 운영위원 및 집행위원 등을 포함한 임원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참여연대의 지배구조에서 일반 시민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얼마나 될까. 앞의 <표 3-1>에서 보았듯이 참여연대 전체 임원들 가운데 일반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6%(44명)이다. 다시 말해 참여연대의 임원 가운데 일반 회사원, 주부, 학생, 회원모임 출신의 임원의 수가 전체의 10% 가량으로, 참여연대의 임원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44명이 12년의 기간 동안 맡았던 운영위원 직책의 수는 모두 80개로 이는 참여연대 12년간 모든 임원직인 2,350개의 3.4%, 누적 운영위원직인 1,079개의 7.4%에 불과한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일반 시민 출신의 임원이 비록 소수여도 의사결정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참여연대 활동 기간 맡았던 임원직을 살펴보면 사실상 운영위원 이상의 중요한 직책으로 진출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듯 일반 시민이 참여연대의 의사 결정 구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 참여연대 전체 임원의 활동년수와 직위 점유율에 대한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전체 531명의 임원들의 활동년수를 살펴보자. 앞의 <표 3-12>에서 전체 임원들의 평균 활동년수는 3.70(표준편차 2.71)으로 나타났다. 최소값은 1, 최대값은 12이며 이때 최대값은 참여연대가 창립된 1994/95년부터 현재 2006년까지의 12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전체 임원 가운데 25.6%는 1년 동안만 참여연대에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¹⁵⁾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년수를 직업별로 살펴보기로 하자.¹⁶⁾ <표 4-1>은 각 직업별 활동년수를 나타낸 표이다. 이 표에서 전체 평균 3.70년보다 높은 값을 보이는 집단을 보면 정계인

15) 활동년수가 1년인 136명의 임원들 가운데에는 현재 2006년 신규 진입자 14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의 활동에 따라 활동년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년수를 1년으로 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규 진입자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향후 활동에 따라 활동년수는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16) 이 작업도 위에서 나타난 2006년 신규 진입자 처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모든 범주의 인물들에게 적용되므로 집단별 활동년수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물과 일반 시민을 제외한 전문가 집단들이다. 일반 시민의 활동년수는 1.75년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표 4-1> 참여연대 임원의 직업별 평균 활동년수

직업 분류	평균 활동년수	사례수	표준편차
종교계	5.21	28	2.79
법조계	4.84	56	2.57
의료계	4.55	11	3.11
예술문화	4.28	29	2.68
학계	4.27	170	2.89
언론계	4.16	19	2.83
기업경영	4.00	27	2.99
시민운동가	3.81	26	3.11
정계	2.33	6	1.51
일반 시민	1.75	44	1.01
미수집	2.37	115	1.76
전체	3.70	531	2.71

다음으로 임원들의 총직책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표 4-2>는 직업별 총직책의 평균을 보여준다. 법조계 인사들이 가장 많은 직책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수는 6.52개이다. 그 다음으로 종교계(6.32), 시민운동가(5.35), 학계(5.28), 의료계(5.18)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반면 가장 적은 직위를 가졌던 집단은 정치계 인물(2.33)과 일반 시민(1.82)으로 나타났다. 모두 전체 평균인 4.4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며, 일반 시민은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평균 직책수를 살펴보자. 앞서 보았듯이 1인당 1년당 직책수의 전체 평균은 1.15로 나타난 바 있다. <표 4-3>은 직업 분류별로 연평균 직책수의 현황을 도표화한 것인데, 여기서 전체 평균인 1.15보다 높은 값을 보이는 집단은 시민운동가, 법조계, 학계 세 집단이며, 나머지 집단들은 모두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인다. 특히 일반 시민의 연평균 직책수는 1.02개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4-2> 참여연대 임원의 직업별 평균 총직책수 현황

직업 분류	평균 총직책수	사례수	표준편차
법조계	6.52	56	4.77
종교계	6.32	28	5.45
시민운동가	5.35	26	4.79
학계	5.28	170	4.36
의료계	5.18	11	4.96
언론계	4.95	19	4.98
기업경영	4.67	27	4.32
예술문화	4.28	29	2.68
정치	2.33	6	1.51
일반 시민	1.82	44	1.21
미수집	2.41	115	1.76
전체	4.43	531	4.11

<표 4-3> 참여연대 임원의 연평균 직책수의 직업별 현황

직업	연평균 직책수	사례수	표준편차
시민운동가	1.55	26	0.82
법조계	1.32	56	0.54
학계	1.21	170	0.40
기업경영	1.14	27	0.32
종교계	1.12	28	0.38
언론계	1.09	19	0.27
의료계	1.05	11	0.18
일반 시민	1.02	44	0.10
정치	1.00	6	0 .00
예술문화	1.00	29	0 .00
미수집	1.02	416	0.09
합계	1.15	531	0.39

위의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 시민은 참여연대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된 집단임이 분명하다. 이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우려가 단순히 우려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다른 어떤 시민단체보다 회원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로서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결국 지금까지의 분석은 일반 시민이 참여연대의 지배구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회비만 내는 지지그룹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제 한 연구는 참여연대 총회에서의 회원들의 역할에

대해 논하면서 “참여연대는 1만 4,000여 명의 회원조직이지만 90% 이상의 회원들이 참여연대 운동에 대한 지지자, 재정적 후원자로서 자기 역할을 규정”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박영선, 2003 : 31).

그렇다면 시민운동에 시민이 없다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누가 가장 많은 활동 연수와 직책을 점유하면서 참여연대의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부수적으로 드러났듯이 활동 연수가 상대적으로 길고 복수의 직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특정 인물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참여연대의 임원 직책 가운데 특히 운영위원과 집행위원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을 것이다.

2. 참여연대 운영위원·집행위원의 성격

참여연대 임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직책 가운데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 집행위원들의 특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이들은 참여연대의 활동과 정책의 장기적 그리고 구체적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 주요한 의사결정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분석은 참여연대 지배구조의 핵심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전체 531명의 임원 가운데 자문위원과 고문을 맡았던 임원을 제외하면 운영위원과 집행위원을 맡았던 인물은 모두 378명이다.

<표 4-4> 참여연대 운영·집행위원의 직업 분포

직업	빈도	%(N=378)	유효 %(N=290)
정계	2	0.53	0.70
학계	115	30.42	39.66
법조계	41	10.85	14.14
예술문화	14	3.70	4.83
종교계	15	3.97	5.17
시민운동	23	6.08	7.93
기업경영	18	4.76	6.21
일반 시민	44	11.64	15.17
언론계	12	3.17	4.14
의료계	6	1.59	2.07
미수집	88	23.28	-
합계	378	100.0	100.00

먼저 <표 4-4>에서 이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은 학계로 나타

났다. 이들은 전체 378명의 운영·집행위원 가운데 115명으로, 직업을 추적할 수 없었던 88명을 제외한 290명 가운데 39.6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집단은 일반 시민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연대 산하 회원모임의 회장들로서 전수인 44명(15.17%) 모두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임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법조계(41명, 14.14%), 시민운동가(23명, 7.93%), 기업경영인(18명, 6.21%)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통계를 보도록 하자. <표 4-5>는 참여연대의 운영위원·집행위원 가운데 출신 고등학교를 확인할 수 있었던 102명에 대한 통계를 보여준다. 이 표를 참여연대 전체 임원의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통계 <표 3-8>과 비교해보면, 먼저 경기고, 서울고, 중앙고 등 서울 소재의 명문 고등학교들의 비중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고와 광주일고와 같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고등학교들의 비중도 더욱 커진다. 부산고의 경우는 4.7%에서 5.88%로, 광주일고의 경우 2.9%에서 4.90%로 그 비중이 각각 높아진다.

<표 4-5> 참여연대 운영·집행위원의 출신 고등학교별 분포

고등학교	빈도	%(N=378)	유효 %(N=102)
경기고	15	3.97	14.71
부산고	6	1.59	5.88
광주일고	5	1.32	4.90
서울고	4	1.06	3.92
중앙고	4	1.06	3.92
대전고	3	0.79	2.94
서울 사대부고	3	0.79	2.94
진주고	3	0.79	2.94
검정고시	3	0.79	2.94
경기여고	2	0.53	1.96
경동고	2	0.53	1.96
경북고	2	0.53	1.96
용산고	2	0.53	1.96
제물포고	2	0.53	1.96
해운대고	2	0.53	1.96
소수	44	0.26	15.94
미수집	276	73.02	-
합계	378	100.00	100.00

주 : ‘소수’는 빈도가 1인 고등학교임.

다음으로 출신 대학교에 대한 통계를 보도록 하자. <표 4-6>의 운영위원과 집행위원 가운데 출신 대학을 확인할 수 있는 199명의 출신 대학별 분포표이다. 여기서 보듯이 주요 출신 대학들의 구성은 전체 임원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표 3-10>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다른 대학들이 전체 평균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비중을 보이는 데 반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3개 대학의 비중이 전체 비중보다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서울대의 경우 49.2%에서 51.3%로, 고려대의 경우 10.0%에서 11.1%로, 연세대의 경우 8.1%에서 9.1%로 각각 높아진다.

<표 4-6> 참여연대 운영·집행위원의 출신 대학별 분포

대학교	인원(명)	%(N=378)	%(N=199)
서울대	102	26.98	51.27
고려대	22	5.82	11.06
연세대	18	4.76	9.05
성균관대	6	1.59	3.02
동국대	5	1.32	2.51
경희대	4	1.06	2.01
중앙대	4	1.06	2.01
이화여대	4	1.06	2.01
원광대	3	0.79	1.51
한신대	3	0.79	1.51
부산대	2	0.53	1.01
서강대	2	0.53	1.01
숙명여대	2	0.53	1.01
인하대	2	0.53	1.01
전남대	2	0.53	1.01
한국외국어대	2	0.53	1.01
소수	16	4.23	8.04
미수집	179	47.35	-
전체	378	100.0	100.0

주 : ‘소수’는 빈도가 1인 대학교임.

출신 고등학교와 출신 대학교에 대한 분석결과는 참여연대의 지배구조에서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운영위원과 집행위원 378명의 학력이 참여연대가 비판한 삼성의 인적구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컨대 두 집단 모두 경기고 출신 인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삼성 11.2%, 참여연대 14.7%). 또한 두 집단 모두 상위 5개 출신 고등학교의 구성이 대동소이하다. 참여연대의 경우는 경기고, 부산고, 광주일고, 서울고, 중앙고 순이고, 삼성의 경우는 경기고, 경북고, 서울고, 경북고, 부산고·대전고 순이다. 이들은 모두 명문 고등학교이며, 이 가운데 세 학교가 중복되고 있다. 한편 출신 대학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이 동일한 순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자료들은 한국의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참여연대의 엘리트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보

여준다. 참여연대의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의 다수가 교수, 변호사, 출판사 사장, 목사, 의사, 기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었다(월간조선, 2001). 이러한 참여연대의 인적 구성은 ‘명망가 중심의 조직운영’이라는 비판에 자주 직면했다(유석춘·김용민, 2000 : 최낙관, 2004).

아마도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99년부터 참여연대 산하의 회원 모임 대표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포함시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기간은 평균 1.75년으로 다른 범주의 임원들과 비교하여 대부분 짧고(참여연대 전체 임원의 평균 활동년수 3.70년), 또한 임원직책을 겸직하는 사례도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전체 지배구조에서 주변적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다. 다음 인용문을 이러한 경향을 잘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운동방식은 한국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로 충만한 지식인, 변호사, 시민운동가들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진보적인 성향의 지식인들이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혁과제를 설정하면, 시민운동가들이 그 문제를 쟁점화하고, 변호사들은 법적 대응을 모색하며, 개혁의지에 가득 찬 활동간사들이 실질적인 일을 진행한다. 회원들의 직접 참여보다는 간접 참여(회비납부)에 의존한다. 참여연대는 변호사-학자-지식인-활동 간사들의 유기적인 결합체다.”(이경훈, 2001, 「월간조선」에서 재인용)

결국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는 참여연대 지배구조의 인적 구성이 법조인, 명망 있는 학계 인사들,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된 파워엘리트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참여연대가 비판했던 삼성의 인적 구성과 거의 같은 모습이다.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의 박원순 변호사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시민참여를 바라고, 이를 위해 노력해도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적은 상황에서, 그나마 일부 전문가나 지식인의 참여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며 이들에 의해서라도 사회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¹⁷⁾ 또한 한국의 시민단체의 창설에는 종교 지도자나 학계, 인권 분야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이후에도 시민단체가 성장하는데 특정 개인의 리더십이나 명망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강상욱, 2002).

그러나 역으로 그러한 전문가 위주의 인력충원이 일반 시민의 참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여연대의 인적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들에 의해 조직화

17) 참여연대 박원순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 (김용민, 2000).

동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것이 조직 내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유석춘·김용민, 2000).

3. 참여연대의 폐쇄적 지배구조

앞서 참여연대 지배구조의 속성을 살펴보면, 일반 시민의 저조한 참여와 그 대신 소위 우리 사회의 파워 엘리트라 불리는 명망가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인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특정 명망가 중심의 지배구조가 공고해지면서 이들의 지배가 영속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극단적인 경우 참여연대라는 단체는 모든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열려있는 조직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표 4-7>은 각년도별 임원직책수와 임원수를 나타낸 표이다. 여기서 임원직책수는 앞서 8개로 정리한 임원직의 총합을 의미하고, 임원수는 이 8개 범주의 임원직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을 중복을 제외하여 계산한 임원수이다. 또한 직책점유율은 각 해의 모든 직책의 총합을 해당 해의 중복된 임원을 제외한 임원수로 나눈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를 보면 1인당 직책점유율이 1994/95년의 1.2로 시작하여 1999년에 1인 1직책을 기록한 이후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현재 1.3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7> 참여연대의 연도별 임원직책수와 임원수

연도	94-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전체
임원직책수	144	144	173	208	108	230	267	269	217	195	187	208	2,350
임원수	120	118	150	175	108	195	226	226	180	155	152	160	1,965
1인당 직책 점유율	1.20	1.22	1.15	1.19	1.00	1.18	1.18	1.19	1.21	1.26	1.23	1.3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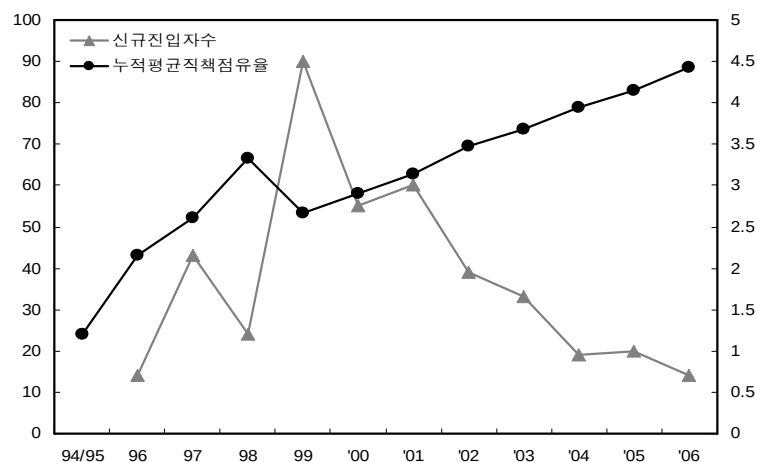
<표 4-8> 참여연대의 연도별 누적직책수와 누적임원수

연도	94/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누적직책수	144	288	461	669	777	1,007	1,274	1,543	1,760	1,955	2,142	2,350
누적임원수	120	134	177	201	291	346	406	445	478	497	517	531
신규진입	-	14	43	24	90	55	60	39	33	19	20	14
누적평균 직책점유율	1.20	2.15	2.60	3.33	2.67	2.91	3.14	3.47	3.68	3.93	4.14	4.43

그러나 이 표는 같은 해의 중복자만 제외하였기 때문에 12년 동안의 전반적인 직책점유 현황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이 표를 누적직책수와 누적임원수로 다시 재구성해 보았다. <표 4-8>은 누적직책수를 누적임원수로 나눈 누적평균 직책점유율을 보여준다. 누적임원수는 여러 해에 걸쳐 활동한 인물을 자연인 1인으로 센 숫자이다. 이 표를 보면 창립 이래 증가 추세에 있던 누적평균 직책점유율은 1999년 일시 감소하였다가, 다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그 결과 1996년 누적평균 직책점유율이 2.15에서 2006년 현재 4.43으로 두 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증가추세는 <그림 4-1>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신규 진입 임원은 1999년 90명으로 최대값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14명에 그쳤다. 이 두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임원이 참여연대의 지배구조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참여연대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해가 거듭할수록 새로운 임원진의 진입 없이 기존의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임원직을 점유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1> 참여연대 임원의 누적평균 직책점유율과 신규진입자수의 연도별 추이



특히 이러한 신규진입 임원의 감소와 누적평균 직책점유율의 증가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9년은 참여연대의 발전과정에서, 상근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시기라고 평가된다(조희연, 1999 : 박영선, 2003). 이러한 사무처 리더십 강화의 가장 큰 요소로 참여연대 창립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의 리더십 안정이 꼽힌다.

또한 이 시기는 회원모임의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회원사업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특징을 보인다. 회원모임의 대표가 운영위원회 등 참여연대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서 일반회원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자리 잡고, 운영위원회에도 회원대표의 참여가 제도화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는 참여연대 지배구조가 회원, 전문가 볼런티어, 상근활동가로 구성되는 삼자의 관계로 확대된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이 시기는 지도부의 조직운영이 안정화되는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어 전반적으로 참여연대의 지배구조가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어가는 출발점이 된 시점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지배구조의 안정화 직후(1998년)부터 역설적이게도 신규진입 임원이 감소하고 누적평균 직책점유율이 증가하는 모순적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한국의 시민단체가 태생부터 안고 있었던 엘리트 중심의 과두제적 지배구조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다(송복, 1991).

앞서 살펴보았던 엘리트 중심의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두 가지 특성 역시 한국의 시민단체의 과두제적 지배구조의 속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식인 및 사회적 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조직 운용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여 시민사회내에 시민운동의 분절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최낙관, 2004 : 45-46). 결국 이러한 참여연대의 과두제적 지배구조는 소수의 특정 명망가들이 조직내 임원직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의 독점이 조직이 안정화될수록 더욱 심화되고 영속화된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견제할 새로운 임원의 진입이 제한됨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견제 장치도 미비하다는 점에서, 참여연대 조직의 폐쇄성으로 연결된다.

한 연구는 참여연대가 분권화된 집행, 실행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기구 또는 인물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다(박영선, 2003 : 32). 그러나 앞서 보았던 자료들은 비록 지배구조가 형식적으로는 분권화되었지만, 내용적으로 소수의 인물들이 겸직을 통해 지배구조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것이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참여연대 지배구조를 점유하고 있는 특정 명망가와 그들의 집단들이 어떠한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이너서클은 참여연대의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참여연대 내부의 지배구조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한국사회 전체를 참여연대의 정책적 목표의 실행을 위해 동원하는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다음 절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V. 참여연대의 이너서클

어떤 인물 또는 집단이 참여연대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는 531명 임원들의 다양한 경력을 기반으로 이들 간에 어떠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531명 임원의 경력을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다.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앞서 설명한 참여연대 임원의 경력 가운데 소속단체에 관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 105개, 언론관련 단체 44개, 예술문화단체 20개, 법조단체 50개, 기업 44개, 학술단체 38개, 재직대학 51개, 의료단체 16개, 종교단체 36개, 정당 16개, 기타 15개 등 총 435개의 소속단체가 해당된다. 또한 이에 더해 출생지역,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서울·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기타(이북, 제주, 해외) 지역별로 구분된 6개의 출생지역 변수, 77개 출신 고등학교 변수, 39개 출신 대학 변수들이 분석 대상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참여연대 임원들이 서로 어떠한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즉 소속단체 435개, 출생지역 6개, 출신 고등학교 77개, 출신 대학교 39개를 모두 합한 557 종류의 관계에 531명의 임원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매트릭스를 구성했다. 이에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인물을 기준으로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수(집단)를 기준으로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이다.

먼저 인물별 매트릭스 구성에서는 참여연대 전체 임원 531명 가운데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제외하였다.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네트워크에서 이들은 그 어떤 유의미한 관계도 갖지 않은 고립된 인물들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참여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어도 다른 참여연대 임원들과 맺는 관계가 포착되지 않는 인물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고립된 이들을 제외하면 전체 분석 대상은 334명으로 좁혀진다.

또한 변수별 매트릭스 구성에서는 557 종류의 관계 가운데 해당 인물이 한 명밖에 없는 변수들, 예를 들어 참여연대 임원 가운데 소속인물이 하나인 단체나 집단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참여연대 임원들이 동일한 단체나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맺는 관계를 분석하는데 전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계가 전혀 없는 소속단체를 제외하면 앞서 설명한 557개 종류의 관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25개, 언론단체 20개,

예술문화단체 3개, 법조단체 19개, 기업 5개, 학술단체 7개, 의료단체 3개, 종교단체 7개, 재직대학 29개, 정당 변수 8개, 기타단체 1개, 출생 지역 6개, 출신 고등학교 23개, 출신 대학교 25개만이 최소 둘 이상의 참여연대 임원들이 소속하거나 관여하는 단체로 나타난다. 결국 이들 181개의 변수가 분석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된 334명의 181개 변수에 관한 관계를 기초로 인물별 및 변수별 매트릭스를 구성하기로 한다. 먼저 인물을 중심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해보면 <표 5-1>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매트릭스의 규모상 일부 제한된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다.

<표 5-1> 인물별 매트릭스(334 × 334) 보기

구 분		1* 강경선	2 강근환	3 강명구	4 강성남	5 강송식	6 강연균	7 강원돈	8 강원택	9 강치원	10 강행원	11 고세훈	12 고형열	13 공성진	·	·	·	334 황평우
1	강경선*	3	0	1	1	1	0	0	2	0	0	1	0	1	·	·	·	
2	강근환	0	2	0	0	1	1	0	0	1	1	0	0	0				
3	강명구	1	0	3	0	0	0	0	1	0	0	1	0	1				
4	강성남	1	0	0	1	0	0	0	0	0	0	0	0	0				
5	강송식	1	1	0	0	3	1	0	1	1	1	0	0	0				
6	강연균	0	1	0	0	1	2	0	0	1	1	0	0	0				
7	강원돈	0	0	0	0	0	0	3	0	0	0	0	0	0				
8	강원택	2	0	1	0	1	0	0	3	0	0	1	0	1				
9	강치원	0	1	0	0	1	1	0	0	4	1	0	0	0				
10	강행원	0	1	0	0	1	1	0	0	1	2	0	0	0				
11	고세훈	1	0	1	0	0	0	0	1	0	0	3	0	2				
12	고형열	0	0	0	0	0	0	0	0	0	0	0	3	0				
13	공성진	1	0	1	0	0	0	0	1	0	0	2	0	5				
·	·																	
·	·																	
·	·																	
334	황평우																	

주 : *매트릭스에 나타난 인물별 일련번호는 참여연대의 전체 531명의 임원 가운데 네트워크 분석에서 관계가 포착되지 않는 고립된 197명의 임원을 제외한 334명의 임원들에게만 가나다 순으로 부여된 고유번호이며, 이는 <부록 7>의 일련번호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는 531명 전체 임원을 가나다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 <부록 3>, <부록 4>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인물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행과 열에는 각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34명의 인물이 열거되어, 결국 이 매트릭스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한 대칭 매트릭스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리고 각 셀에 입력된 수는 181개의 가능한 관계 가운데 이들이 실제 맺고 있는 관계

의 수를 의미한다. 한편 대각선상의 셀에는 181개의 가능한 관계 즉 181개의 집단 가운데 해당 인물이 속한 집단의 수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강경선 × 강경선 본인 셀의 경우는 3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181개의 가능한 관계 가운데 강경선은 출생지역 기준으로 서울·경기, 출신대학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재직대학 기준으로 방송통신대학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수는 강경선이 실제 속한 다양한 집단 가운데 소속 인물이 본인밖에 없는 집단(변수)을 제외한 수다. 또한 강근환 × 강근환의 경우 2의 수가 입력되어 있다. 이는 강근환이 소속된 단체가 두 개라는 뜻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181개의 가능한 관계 가운데 강근환은 출생지역 기준으로 호남, 출신대학 기준으로 서울신학대학교라는 두 가지 변수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수는 강근환이 실제 속한 다양한 집단 가운데 소속 인물이 본인밖에 없는 집단(변수)을 제외한 수다.

한편 강경선 × 강근환 셀에는 0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는 강경선과 강근환이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은 어떤 집단에도 동시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강경선 × 강명구 셀에 입력된 1은 두 사람이 하나의 집단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출신대학이 서울대학교라는 하나의 변수만을 공유하고 있다. 강경선 × 강원택 셀에는 2가 입력되어 있는데, 이는 둘 사이에 두 개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서울대학교 출신 그리고 서울 지역 출신이라는 두 변수를 공유한다.

다음으로 변수별 매트릭스는 앞서 설명한 557개의 변수 즉 557개의 집단 가운데 소속인원이 2 이상인 181개의 변수(집단)를 기초로 구성하였다. 먼저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한 매트릭스의 행과 열에는 정당과 재직대학을 제외한 소속단체 90개(시민·사회단체 25개, 언론단체 20개, 예술문화단체 3개, 법조단체 19개, 기업 5개, 학술단체 7개, 의료단체 3개, 종교단체 7개, 기타단체 1개), 출신 고등학교 23개, 출신 대학교 25개, 출신 지역 6개, 재직대학 29개, 정당 8개의 순으로 변수(집단)가 배열되어 있다.

제한된 지면에 이 매트릭스의 전모를 보여줄 수 없어 <표 5-2>와 같이 일부의 형식만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 매트릭스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한 대칭 매트릭스의 모습을 갖게 된다. 대각선에 존재하는 셀에는 각 변수(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의 숫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대각선 바깥의 셀에 입력된 숫자는 334명 가운데 해당하는 행과 열 두 변수(집단)에 동시에 속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겨레 × 한겨레 셀의 경우는 16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는 334명 가운데 한겨레에 속한 참여연대 임원의 수가 16명임을 의미한다. 한편 한겨레 × 민변 셀에는 4가 입력되어 있는데, 이는 한겨레신문과 민변에 동시에 소속된 인물이 4명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 들은 김형태, 백승헌, 이돈명, 홍성우 4인이다. 또한 경기고 × 서울대 셀의 경우 20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는 334명 임원 가운데 두 집단에 동시에 속하는 인물이 모두 20명임을 말해준다.

앞서 구성한 인물별 및 변수별 두 개의 매트릭스를 UCINET 6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연결망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이는 각 인물들이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분석과 각 변수(집단)들이 소속 인물들의 중첩을 통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분석이 된다.

<표 5-2> 변수별 매트릭스(181 x 181) 보기

구 분			소속단체 90개				출신고 23개			출신대학 25개			지역 6개		재직대학 29개			정당 8개		
			1*	2	·	90	91	·	113	114	·	·	139	·	145	·	174	175	·	181
			한겨레	민변	·	기독교연합	경기고	·	계성고	서울대	·	·	서울경기	·	서울대	·	·	열린우리당	·	민주당
소속 단체 90개	1*	한겨레	16	4	·	0	3	·	0	9	·	·	4	·	0	·	·	0	·	0
	2	민변	4	15	·	0	4	·	0	11	·	·	5	·	0	·	·	0	·	0
	·	·	·	·	·	·	·	·	·	·	·	·	·	·	·	·	·	·	·	·
	90	기독교연합	0	0	·	2	0	·	0	1	·	·	0	·	0	·	·	0	·	0
출신 고 23개	91	경기고	3	4	·	0	25	·	0	20	·	·	10	·	1	·	·	2	·	0
	·	·	·	·	·	·	·	·	·	·	·	·	·	·	·	·	·	·	·	·
	113	계성고	0	0	·	0	0	·	2	2	·	·	0	·	0	·	·	0	·	0
출신 대학 25개	114	서울대	9	11	·	1	20	·	2	151	·	·	32	·	15	·	·	4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 6개	139	서울경기	4	5	·	0	10	·	0	32	·	·	65	·	3	·	·	4	·	0
	·	·	·	·	·	·	·	·	·	·	·	·	·	·	·	·	·	·	·	·
재직 대학 29개	145	서울대	0	0	·	0	1	·	0	15	·	·	3	·	18	·	·	0	·	0
	·	·	·	·	·	·	·	·	·	·	·	·	·	·	·	·	·	·	·	·
	174	·	·	·	·	·	·	·	·	·	·	·	·	·	·	·	·	·	·	·
정당 8개	175	열린우리당	0	0	·	0	2	·	0	4	·	·	4	·	0	·	·	11	·	0
	·	·	·	·	·	·	·	·	·	·	·	·	·	·	·	·	·	·	·	·
	181	민주당	0	0	·	0	0	·	0	0	·	·	0	·	0	·	·	0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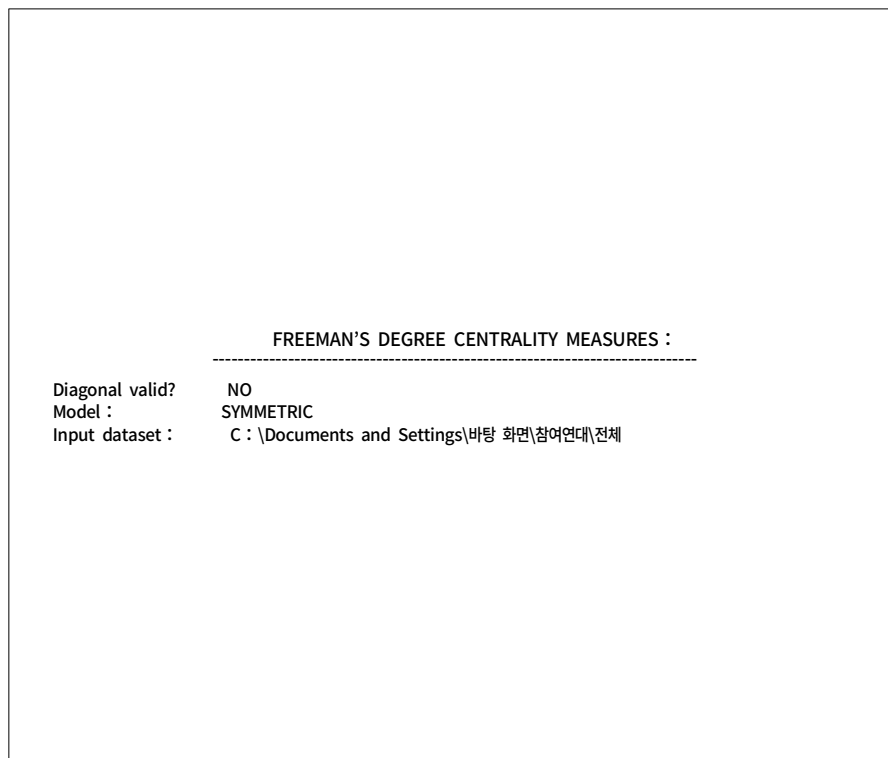
주 : * 각 변수(집단)에 부여된 일련번호는 <부록 5>에 열거된 모든 변수 557개 가운데 실제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된 소속인원이 두 명 이상인 변수(집단) 181개에 부여된 고유번호이다. 이는 <부록 8>에서 각 변수(집단)에 부여된 일련번호와 일치한다.

1. 인물별 네트워크 분석

먼저 참여연대 임원진의 연결망 중심성을 분석해 보았다. 연결망의 중심성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연결정도(degree)는 한 결점이 연결망 내의 다른 결점과 맺고 있는 결점의 숫자로 정의된다.¹⁸⁾ 연결정도는 속칭 마당발이라고 불리는 사람 즉 관계를 많이 맺는 사람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이 수치가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고, 정보의 흐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석된다.

앞서 구성한 매트릭스를 토대로 참여연대 임원들의 연결정도(degree)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수치는 181개의 변수(집단)에서 334명의 참여연대 임원 각각이 얼마나 중첩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출력결과물 5-1>에서 보듯이 연결정도(degree)가 가장 높은 인물은 박원순(293)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홍성우(279), 성유보(270), 정대화(261), 김형태(257), 임지순(256) 등이 높은 값을 보인다(출력결과물 전체 자료는 <부록 7> 참고). 334명의 임원 가운데 전체 평균값 128.4보다 높은 값을 보인 인물은 모두 154명(박원순부터 차병직까지)이고, 평균값보다 낮은 값을 보인 인물은 모두 180명(배종대부터 임통일까지)이다.

<출력결과물 5-1> 참여연대 임원의 인물별 degree분석결과



18) 연결정도(degree)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김용학, 2003 : 95).

$$C = (Z + Z') / (Z)$$

	1 Degree	2 NrmDegree	3 Share
	293.000		0.007
	279.000		0.007
박원순		21.997	
홍성우	270.000	20.946	0.006
성유보	261.000	20.270	0.006
정대화		19.595	
김형태	257.000	19.294	0.006
임지순	256.000	19.219	0.006
안경환		19.144	
이대공	255.000	19.144	0.006
윤종현	255.000	19.144	0.006
	255.000		0.006
			중략
	135.000		0.003
백승현	130.000	10.135	0.003
차병직		9.760	
배종대	128.000	9.610	0.003
배손근	123.000	9.234	0.003
허인회		8.934	
	119.000		0.003
			중략
			0.000
박기호	1.000	0.075	0.000
김승관	1.000	0.075	0.000
최상석	1.000	0.075	0.000
임통일	1.000	0.075	0.000
			0.000
DESCRIPTIVE STATISTICS			
	1 Degree	2 NrmDegree	3 Share
1 Mean			0.003
2 Std Dev	128.407	9.640	0.002
3 Sum	86.497	6.494	
4	42888.000	3219.820	1.000
Variance	7481.655	42.169	0.000
5 SSQ	8006000.000	45123.953	
6 MCSSQ			0.004
7 Euc Norm	2498872.500	14084.313	0.001
	2829.488	212.424	
8 Minimum	1.000	0.075	0.066
9 Maximum	293.000	21.997	0.000
			0.007

Network Centralization = 12.43%
Heterogeneity = 0.44%, Normalized = 0.14%

Note : For valued data, the normalized centrality may be larger than 100.
Also, the centralization statistic is divided by the maximum value in the input dataset.

Actor-by-centrality matrix saved as dataset Freeman Deg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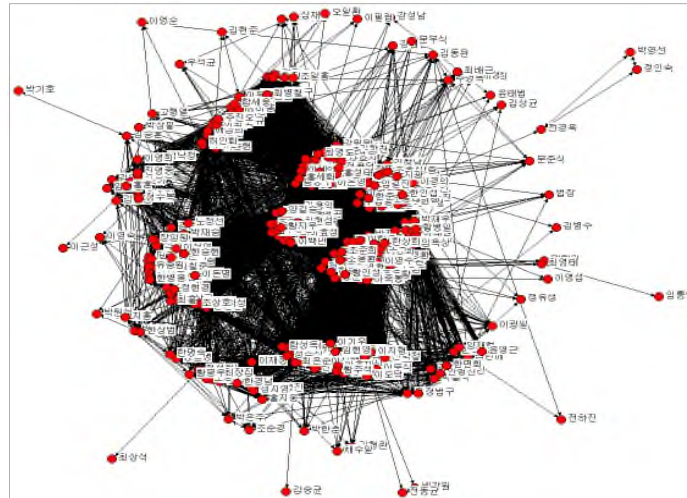
다음 단계의 작업은 이 자료를 UCINET 6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이들의 관계망 분포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일이다. 분포를 시각화하는 기준은 n차원의 공간에서 계산된 두 인물간의 기하학적 거리(Euclidian Distance)이다. 이 거리를 기초로 n차원에 분포한 각 인물간의 입체적 거리를 2차원의 평면으로 환원시켜야 시각화가 가능하다. 2차원으로 환원시킬 때 만약 인물의 위치가 겹치는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분산되도록 그리는 방법이 있다(node repulsion). 여기서는 우선 2차원 평면에 투시되는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겹쳐진 인물을 강제로 분산시키는 기능과 분산시킬 때 거리를 같도록(equal edge) 강제하는 기능을 병행해 사용한다.¹⁹⁾ 한편 그림에서 인물(node)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화살표는 모두 양방향이다. 이는 두 인물이 대칭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두 인물 사이의 거리는 서로 중첩된 관계가 많을수록 가깝고, 반대의 경우 먼 곳에 위치한다.

먼저 모든 인물에 관한 자료를 입력한 다음 서로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334명의 관계망을 그려보았다. 그 결과 <그림 5-1>과 같이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그물망이 나타난다. 이는 334명의 임원이 181개의 변수(집단)를 통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망을 2차원 평면에 시각화한 결과이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의 관계망을 구분해 내는 작업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준으로 관계의 수를 단계적으로 높여가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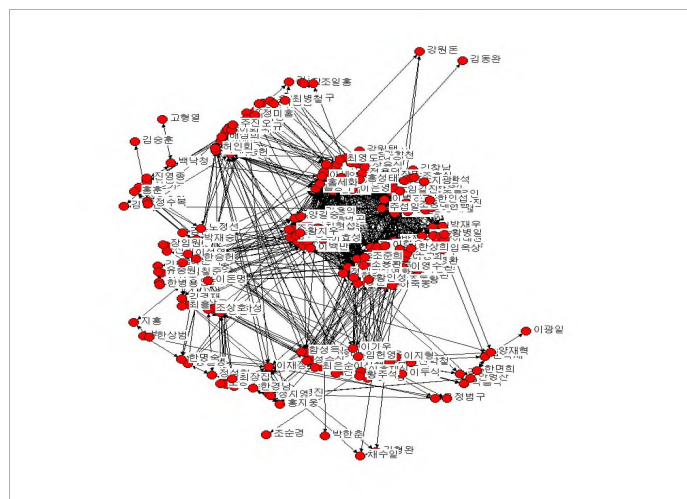
<그림 5-2>에서는 맺고 있는 관계의 수 기준을 2로 올려보았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34명의 임원 가운데 181개의 변수(집단)를 통해 서로 맺고 있는 관계가 둘 이상인 임원만이 네트워크에 남게 된다. <그림 5-2>를 <그림 5-1>과 비교해 보면 네트워크 상에서 주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던 인물들이 다수 사라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로 거리를 두고 예닐곱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19) UCINET6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 상의 인물들(node)을 배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서로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하는 distance (Euclidian Distance)이다. 그러나 거리만으로 인물을 배열하다보면 동일한 거리에 있는 인물들은 같은 위치에 배치되어 겹치게 되어 구분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겹치는 인물들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두 번째인 distance + node repulsion이다. 마지막 방법인 distance + node repulsion+equal edge는 겹쳐진 인물을 분산시킬 때 이들간 거리를 동일하게 배열하는 방법이다. 이들 방법 가운데 각각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는 각각의 그림에 주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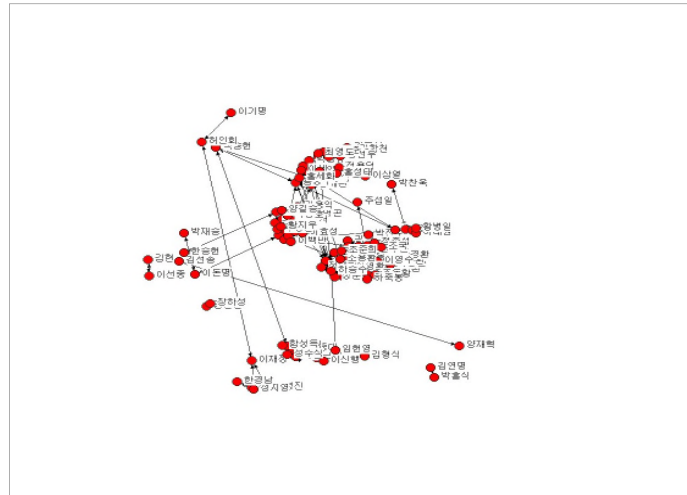
<그림 5-1> 참여연대의 인물별 네트워크 : 관계의 수 1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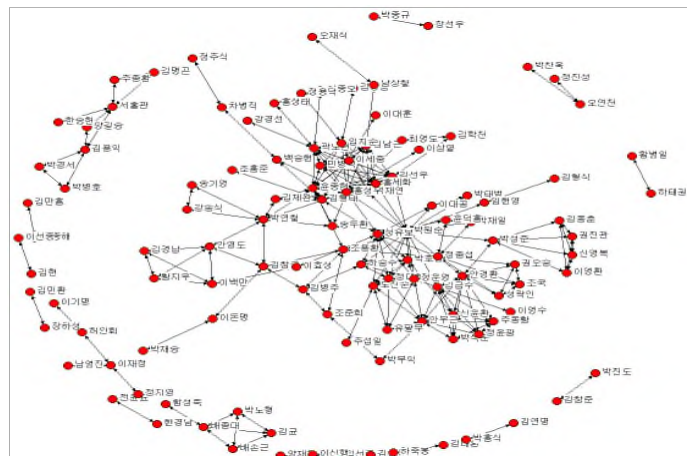
<그림 5-2> 참여연대의 인물별 네트워크 : 관계의 수 2 이상



<그림 5-3> 참여연대의 인물별 네트워크 : 관계의 수 3 이상



<그림 5-4> 참여연대의 인물별 네트워크 : 관계의 수 3 이상
distance + node repulsion + equal edge



제로 분산시킨 결과이다. 이는 마치 사진을 찍을 때 거리에 따라 초점을 앞으로 당기는 zoom-in과 같은 효과를 준다. 또한 동시에 사진기의 앵글을 바꾸면서 촬영대상이 최대한 포착되도록 하는 효과도 갖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림 5-3>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확대하면서 동일한 위치에 겹쳐져 있던 인물을 보기 쉽게 드러내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체 네트워크의 구성과 형태를 유지한다.

<그림 5-4>는 변두리에 있는 소수 구성원들로 만들어진 집단을 제외할 때 크게 보아 두 집단이 전체 관계망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들은 박원순, 성유보, 이대공 등으로 구성된 오른쪽 하단의 집단과 홍성우, 홍세화, 김형태 등으로 구성된 왼쪽 상단의 집단이다.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중심성(degree) 분석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들은 모두 degree로 분석한 중심성에서 높은 값을 갖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수를 4로 높여 보았다. 그 결과 <그림 5-5>와 같이 대부분의 임원들이 네트워크에서 사라지고 넷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소수만이 남게 된다. 각각의 인물들을 구분해 보기 위해 <그림 5-5>를 마찬가지로 <그림 5-6>으로 확대·재구성해 보았다. 그 결과 서로 가장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18인이 남게 된다. 그림을 보면 박원순을 중심으로 하는 성유보, 이대공, 박호성 네트워크와 홍성우를 중심으로 하는 김형태, 홍세화, 윤종현의 네트워크가 가장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외에 안영도-박연철, 정운영-정대화, 박석운-신윤환, 차병직-정주식, 김병주-조용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관계의 수가 5 이상인 경우는 자료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료가 존재하는 181개의 변수(집단) 가운데 서로 중첩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집단)는 사실상 소속단체 90개와 정당 8개뿐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집단(변수)은 상호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출생지역의 경우 한 지역에 소속되면 다른 지역에는 소속될 수 없다. 출신고등학교, 출신대학교, 재직대학교 등의 변수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자료에 존재하는 관계의 최대값은 4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박원순과 성유보는 영남 출생, 서울대 출신, 한겨레신문, 포스코/청암이라는 네 가지 변수(집단)를 공유한다. <그림 5-6>에 화살표로 연결되는 인물들은 모두 이와 같이 네 개의 변수(집단)를 공유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자. 참여연대 임원간의 네트워크는 박원순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네트워크와 홍성우를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네트워크, 총 두 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있다. 박원순은 언론계 인사 성유보, 기업경영인 이대공, 학계 인물인 박호성과의 관계를 통해 참여연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홍성우는 법조계 인사인 김형태, 윤종현 그리고 언론계 인사인 홍세화와 관계를 맺으면서 역시 참여연대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두 이너서클이 결국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참여연대의 핵심 지배 집단이 된다.

2. 변수(집단)별 네트워크 분석

앞서 구성한 변수(집단)별 매트릭스를 토대로 참여연대 임원들이 소속된 집단간의 중심성 지표인 연결정도(degree)를 구해 보았다. 이 수치는 181개의 변수(집단)들이 334명의 참여연대 임원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중첩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변수의 degree 분석결과는 <출력결과물 5-2>와 같다.

<출력결과물 5-2> 참여연대 임원의 변수별 degree 분석결과

FREEMAN'S DEGREE CENTRALITY MEASURES :			

Diagonal valid? NO			
Model : SYMMETRIC			
Input dataset : C : \Documents and Settings\참여연대\변수원자료출력\변수매트릭스			
	1 Degree	2 NrmDegree	3 Share
	427.00 0		
서울대	225.00 0	7.413	0.110
경상도		3.906	0.058
서울/경기	179.00 0	3.108	0.046
전라도	152.00 0	2.639	0.039
한겨레신문		1.771	0.026
	102.00 0		

		중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2.000	0.382	0.006
문화방송	22.000	0.382	0.006
전주고	22.000	0.382	0.006
법무법인 덕수	21.000	0.365	0.005
민족화해협력범국민 협의회	21.000	0.365	0.005

		중략	
숙명여대	1.000	0.017	0.000
부산대	1.000	0.017	0.000
한국의국어대	0.000	0.000	0.000

DESCRIPTIVE STATISTICS			
	1 Degree	2 NrmDegree	3 Share

1 Mean	21.492		
2 Std	40.790		
Dev	3890.0 00	0.373	0.006
3 Sum		0.708	0.010
4	1663.8 63	67.535	1.000
Variance		0.502	0.000
5 SSQ	384762 .000	115.970	0.025
6		90.772	0.020
MCSSQ	301159 .250	10.769	0.159
7 Euc	620.29 2	0.000	0.000
Norm		7.413	0.110
8	0.000		
Minimum			
9	427.00 0		
Maxim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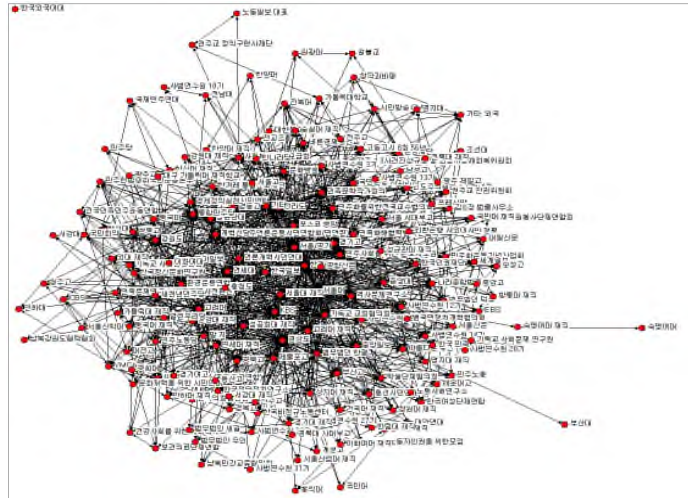
Network Centralization = 7.12%			
Heterogeneity = 2.54%. Normalized = 2.00%			
Note : For valued data, the normalized centrality may be larger than 100.			
Also, the centralization statistic is divided by the maximum value in the input dataset.			
Actor-by-centrality matrix saved as dataset Freeman Degree			

〈출력결과물 5-2〉에서 보듯이 연결정도(degree)가 가장 높은 집단, 다시 말해 참여연대 임원을 구성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서울대 출신(427)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경상도 출생(225), 서울/경기 출생(179), 전라도 출생(152), 한겨레신문(102), 경기도 출신(99), 충청도 출생(87), 고려대 출신(83), 연세대 출신(7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75), KBS(50)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출력 결과물 전체는 〈부록 8〉 참고). 181개 변수(집단) 가운데 전체 평균인 21.49보다 높은 값을 보인 집단은 43개(서울대부터 전주고까지) 이고, 낮은 값을 보인 집단은 138개(법무법인 덕수부터 한국외국어대출신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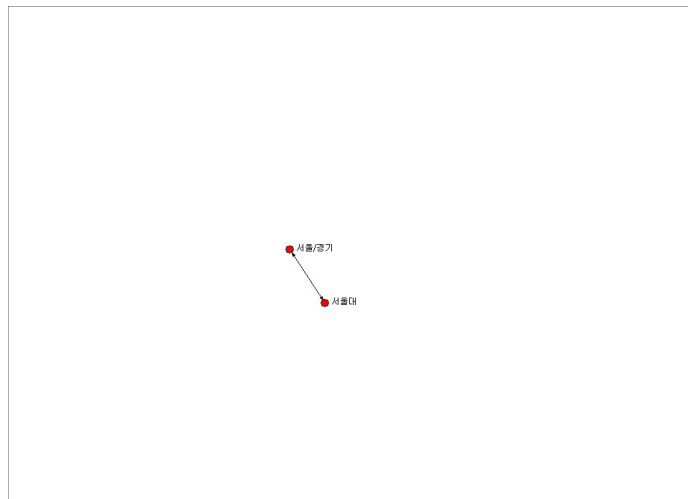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들 집단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UCINET 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려보았다. 〈그림 5-7〉은 그 결과이다. 집단들의 네트워크 그림은 변수(집단)의 수가 모두 181개로, 앞서 그린 334명을 대상으로 그린 인물별 네트워크 분석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그림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핵심적 집단부터 주변부 집단으로, 즉 중복된 인물의 수(degree)를 단계적으로 하나씩 낮춰가면서 집단들의 관계를 역추적하는 과정으로 집단(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가장 연결강도가 높은 두 집단은 〈그림 5-8〉처럼 서울대와 서울/경기 지역출신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대와 서울/경기 지역출신이 가장 많은 중첩인물을 가지며 이들의 중첩된 인물의 수(degree)는 32이다.

<그림 5-7> 참여연대의 변수(집단)별 전체 네트워크 : degree ≥ 1



<그림 5-8> 참여연대의 변수별 네트워크 : degree =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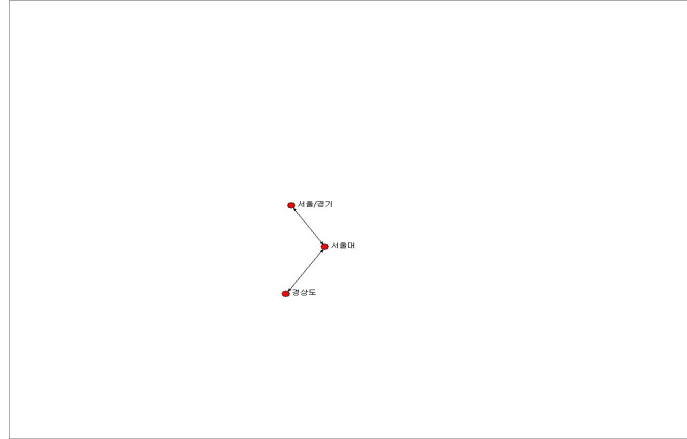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집단은 경상도 출생인데, <그림 6-9>에서 보듯이 이들은 서울대 출신과의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에 등장한다. 이때의 degree 즉 중첩된 임원의 수는 23이다. 다음 단계인 <그림 6-10>에서는 새로 전라도 출생 집단이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서울대와의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에 진입한다(degree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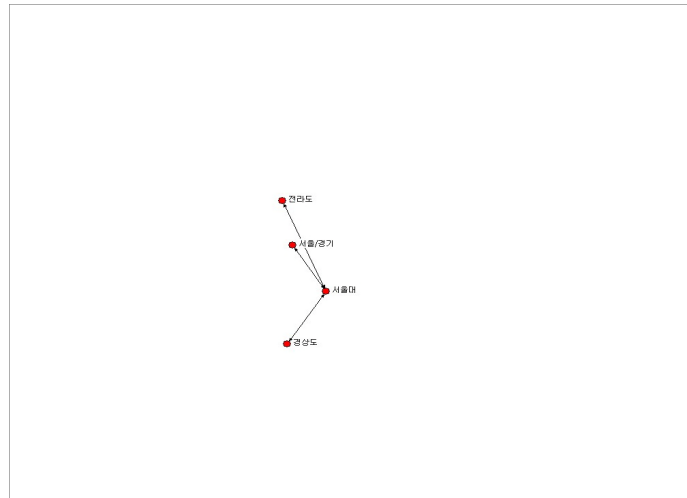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6-11>에서 역시 서울대 출신과의 연계를 통해 경기고가 네트워크에 연결된다(degree = 15). 경기고와 서울대 출신간의 높은 연계성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참여연대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또한 <그림 6-12, 13>에서 보듯이 서울대 재직교수 집단(degree = 12) 과 충청도지역 출생 집단(degree = 11) 역시 서울대 출신을 공통 배경으로 전체 네트워크에 등장한다. 그만큼 서울대 출신이라는 조건은 우리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집단임을 참여연대의 네트워크 분석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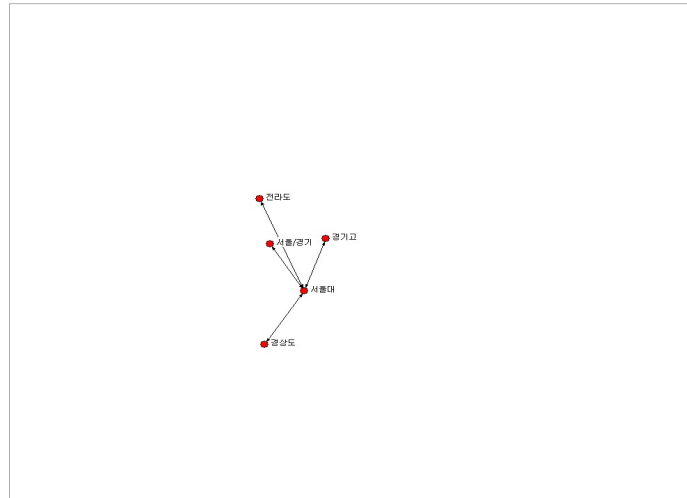
<그림 5-9> 참여연대의 변수별 네트워크 : $\text{degree} \geq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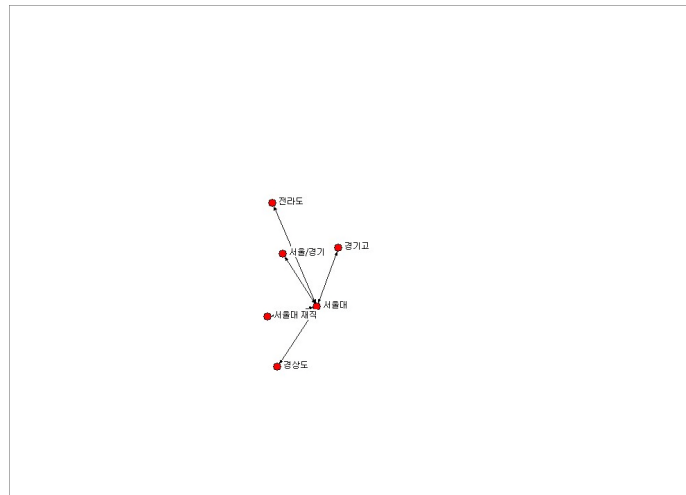
<그림 5-10> 참여연대의 변수별 네트워크 : $\text{degree} \geq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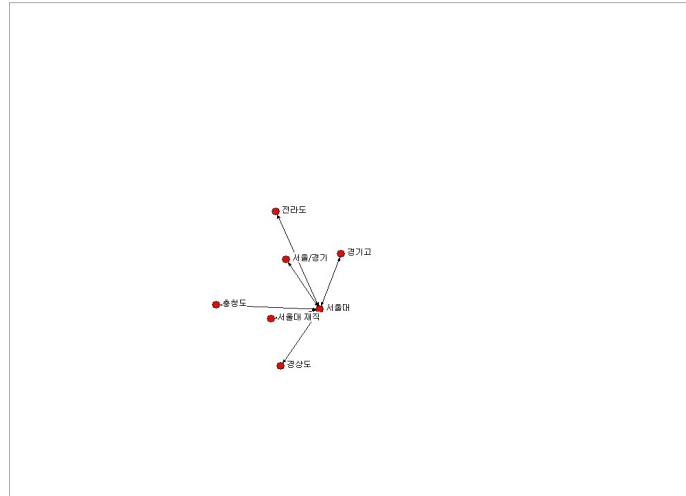
<그림 5-11> 참여연대의 변수별 네트워크 : degree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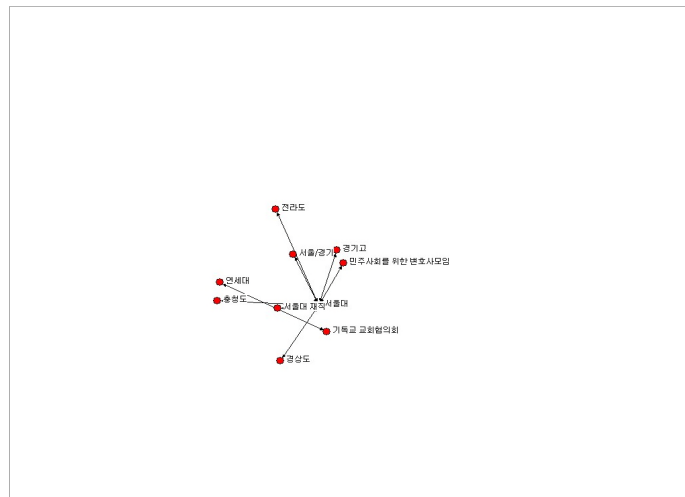
<그림 5-12> 참여연대의 변수별 네트워크 : degree ≥ 12



<그림 5-13> 참여연대의 변수별 네트워크 : degree ≥ 11



<그림 5-14> 참여연대의 변수별 네트워크 : degree ≥ 10



다음 단계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그림 5-14>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비연고적 속성의 집단이 서울대 출신과의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에 새로 등장한다. 또한 연세대 출신과 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두 집단의 네트워크가 서울대 출신과 관계 없이 등장한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관계의 수, 즉 degree는 10이다.

이렇게 진입하는 집단(변수)을 계속 확대해 가면 결국 앞서 보았던 <그림 5-7>의 변수별 전체 네트워크에 이르게 된다. 결국 지금까지의 작업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변수가 전체 집단들 간의 네트워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왜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변수는 연고적 속성의 변수(출생지역, 출신고등학교 등)나 연고적 속성의 변수(기독교교회협의회, 민변, 한겨레 신문, 민교협 등)를 막론하고 참여연대 임원의 가장 큰 공통분모이기 때문이다.

VI. 참여연대의 권력유착

앞서 본 자료들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명망가들이 참여연대 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참여연대가 정책적 지향을 실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적 자원은 학계, 법조계, 종교계, 예술계 등을 총망라하는 복잡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참여연대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동원하는 바탕이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인적 자원의 확보가 정권과 연계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여연대와 정치권력의 친화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항상 존재해왔다. 이를 요약해 보면 1) 정부에 참여연대 출신 다수가 직접·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2)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정책적 대안들이 정부와 여당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3) 공식적 통로 외에도 ‘이심전심의 교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한겨레21, 2004).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정권 참여에 대한 논의는 학계나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다수 진행된 바가 있다. 이는 크게 ‘개인적인 문제’와 ‘시민단체 전체의 이미지 훼손’이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먼저 시민운동과 정권과의 연계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살펴보자. 이종훈 경실련 공동대표는 “시민운동가들의 공직 참여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운동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며, 시민단체는 단체별로 시민운동 본연의 자세로 활동하면 된다”고 입장을 정리한다. 김영래 한국 NGO 학회 회장은 “시민운동가들의 정치참여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적인 인사들의 정부참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한다(김영래, 1996).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김정동 시민사회포럼 대표는 “시민운동단체들은 아직은 정치참여보다 미성숙한 시민사회의 역량 자체를 키우고 결집시키는 게 더 급급하며 시민단체 인사들이 정권과 밀착되면 중립적 비판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정부와는 비판적, 균형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김정동, 2001). 손봉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시민운동가들도 현실정치나 공직에 참여할 수 있지만 깨끗하지 못한 현재의 정치권에 몸담으면 운동가들도 부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략적 측면에서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한 바 있다(김영래, 2003).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단체대표의 참여는 제한해야 하지만 일반회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최낙관, 2004). 이석연 경실련 전 사무총장은 “일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움직임은 지금까지 쌓아온 시민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을 해치고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는 배신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이러한 소위 “홍위병 논란”에 대해 참여연대 내부 인사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김기식 참여

연대 사무처장은 “과잉해석이라고 못박으며 상근운동가가 아닌 전문가 자문역할을 맡았던 인사들을 과연 시민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한다(최낙관, 2004 : 86).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우리는 정치적 중립은 지키지만 정책 연합은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시민운동이 정부를 바꿔내기 위한 정보와 루트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겨레 21, 2004). 이와는 달리 박원순 전 사무처장은 정부와의 연계성에 대해 비판적이다. 다음은 박원순의 인터뷰 내용이다.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기대하는 역할은 제3자적 감시자, 객관적 비판자다. 만약 시민단체가 정부와 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그 시민단체를 불신하거나 백안시할 것이다. 그럼 그들에게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을 뿐더러 시민운동의 사회적 공신력도 크게 떨어진다. 이러한 현실은 누구보다 현장 활동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만약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이 실패하거나 김대중 정부처럼 부패로 얼룩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은 유한하지만 시민운동은 영원하다.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박원순의 충고는 참여연대의 임원진 구성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표 6-1>은 참여연대 임원의 공직진출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각 인물들의 공직을 분류함에 있어서 한 인물이 여러 공직을 거친 경우 각각의 공직을 따로 구분하였다. 또한 공직을 지낸 정권을 분류하는 기준은 해당 공직을 시작한 시기로 삼았다. 예를 들어 한 인물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공직을 맡은 경우 해당 공직에 진출한 시기가 2000년이므로 김대중 정부로 분류된다.

그 결과 모든 직책의 합은 <표 6-1>과 같이 313개로 나타났고, 공직을 지낸 인물의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150명이었다. 이는 참여연대의 전체 531 임원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 임원이 복수의 공직을 시차를 두고 혹은 동시에 맡고 있어 1인당 평균 2.1개의 공직을 맡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의 공직진출 시기를 정권별로 구분해 보면 김영삼 정부 시기에 22개 공직(7.0%), 김대중 정부 시기에 113개 공직(36.1%), 노무현 정부 시기에 158개 공직(50.5%)에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6-1> 참여연대 임원의 공직 진출 현황 종합(인물 150, 자리 313)

이름	직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 활동기간 비교
			YS	DJ	ROH	기타	
강경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관련자심사분과위 위원	00-02		1			이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 위원	05-			1		이후
강성남	국회입법조사분석실 법사행정담당관	89-99				1	이전
공성진	감사원 자문위원	04			1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03-현			1		이후
	17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 한나라당)	04-			1		이후
곽노현	정책기획위원회 국가시스템개혁분과 정치행정위원	03-현			1		이후
	교육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98-현		1			이후/동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사무총장	05-			1		이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6			1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97-98		1			이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01-03		1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제4기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05-			1		이후
김경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현			1		이후
김 군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자문위원	03-			1		이전/동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5			1		이후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6대 위원장	03-현			1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4-현			1		이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	05-			1		이후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	97-03		1			이후/동시
	한국방송공사 이사	00-03		1			이후
김남근	판사	92-00				1	이전
김대환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회 간사 경제2분과	02-03			1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장	00-04		1			이후/동시
	노동부 21대 장관	04-06			1		이후
김동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03			1		이후
김동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현			1		이후
김동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분과 자문위원	01-현		1			이후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	04-현			1		이후
	문화관광부 차관	92-93				1	이전
김만홍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03-			1		이후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06			1		이후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03-05			1		이후
김명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95-현	1				이전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95-현	1				이후/동시

이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 활동기간 비교
			YS	DJ	ROH	기타	
김민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관리전문위원 위원	04			1		이후
	기획예산처 정부산하기관평가단 평가위원	05			1		이후
	정무 제1장관실 자문위원	95	1				동시
김민환	문화관광부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현			1		이후
김범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91				1	이전
김병섭	국무총리실 부패방지대책협의회 위원	99		1			이전
	행정자치부 조직진단변화관리자문위원회 위원장	04			1		이후
김병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위원	05			1		이후
김상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자문위원	99-04		1			이후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98-00		1			이후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단 단장	99		1			이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02-04			1		이후/동시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05-현			1		이후
김상조	노사정위원회 책임전문위원	98-99		1			이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03			1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자문기구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 위원	00-01		1			이후
김서중	문화관광부 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현			1		이후
김선우	한국방송공사 이사	00-03		1			동시
	EBS 이사	현			1		이후
김선웅	금융감독원 법무실	00-현		1			이후/동시
김성재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00-01		1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99-00		1			이후
	문화관광부 5대 장관	02-03			1		이후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98-99		1			이후
김연명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04-05			1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발전위원회 위원	03-04			1		이후
	보건복지부 연금제도 발전위원회 전문위원	02-			1		이후
김태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95-96	1				이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97-01		1			이전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96-98		1			이전
김학천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	98		1			이후
	EBS 사장					1	?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위원	93	1				이전
김형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통합분과 복지보건팀 위원	03			1		이후
김형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00-02		1			이전/동시
김호기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통합분과 사회언론팀 위원	03-			1		이후/동시
	제16대 대통령취임사준비위원회 위원				1		이후
김홍남	정책기획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	01-03		1			동시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03-현			1		이후

이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 활동기간 비교
			YS	DJ	ROH	기타	
	사회문화소위 위원						
김환석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	05-현			1		이후
남영진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	03-현			1		이후
노정현	행정쇄신위원회 위원	93-97	1				이전
민병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비서관					1	이전
	외교통상부 체코슬로바키아 대사					1	이전
	국회도서관장					1	?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01		1			동시
박노형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					1	?
박병섭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	04-현			1		이후
박상필	행정자치부 공익사업평가위원회 위원	02-04			1		이전/동시
박순성	통일부 민족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	96-현	1				이전/동시
박연철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02-05			1		이후
박영숙	13대 국회의원(전국구, 평민당·신민당·민주당)					i	이전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01		1			이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02		1			이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00		1			이후
박원순	통일부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	98-00		1			이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03-현			1		이후/동시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99-현		1			이후/동시
	법무부 민사소송법개정 심사위원	00		1			이후
	한국방송공사 이사	03			1		이후
박은정	방송위원회 법률자문특별위원회 위원	00-현		1			이후/동시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04-			1		이후/동시
	교육부 교육개혁 자문위원	97		1			이후
박은주	문화관광부 21세기문화정책위원회 위원	현			1		이후
박재승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	05-현			1		이후
	외교통상부 행정심판위원	97		1			이후
	행정자치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위촉직)	00		1			이후
김영호	노사정위원회 위원	01		1			이후/동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98		1			동시
	산업자원부 장관	00		1			이전
김용익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사회정책 수석비서관	현			1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제4분과 위원	01		1			이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04-06			1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00-		1			동시
김용태	행정자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현			1		이후
김유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4-현			1		이후

이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 활동기간 비교
			YS	DJ	ROH	기타	
김익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무위원	95	1				이전
김정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현			1		이후
	행정자치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현			1		이후
김제완	공정거래위원회 외부평가원	?				1	?
김창국	통일부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	00		1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초대위원장	01-04		1			이후/동시
	한국방송공사 이사	00		1			이후
김창남	한국방송공사 정책연구실 객원연구원	95-96	1				이전
박재우	경기도 지방공무원 연수원	93-현	1				이전
박종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04-06			1		이후
박진도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1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국가발전전략분과산업노동팀 위원	03-현			1		이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00-		1			이후
박찬욱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98-01		1			이전/동시
박한춘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02			1		이후/동시
	언론중재위원회 제17대 국회의원선거기사심의위원	현			1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제16대 국회의원선거기사심의위원				1		이후
배종대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
	대검찰청 부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05					이후
	서울시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
백승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00-01		1			이전/동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05-현			1		이후
	한국방송공사 비상임 이사	05-현			1		이후
백종만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통합분과 복지보건팀 위원	03-현			1		이후/동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05			1		이후
법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00-현		1			이후/동시
법장	문화관광부 한국방문의해 추진위원	99		1			이전
	행정자치부(내무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94	1				이전
선미라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해외언론비서관	05-현			1		이후
성락인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96-98		1			이후/동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97-현		1			이후/동시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	04-현			1		이후
성유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03-현			1		이후
손덕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93-96	1				이전
손혁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4-현			1		이후/동시

이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 활동기간 비교
			YS	DJ	ROH	기타	
송두환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05-현			1		이후/동시
	문화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3심의위원회 위원장	03-현			1		이후/동시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04-현			1		이후/동시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05-현			1		이후/동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	00-현		1			이후/동시
	문화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97		1			이후/동시
	검찰 제도개혁위원회 위원	98		1			이후
송창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담당관실 전문위원(교통분야)	99-		1			동시
신광식	제4기 정부정책평가위원회 경제1위원회 위원	03			1		이후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00		1			이후
	외교통상부(통상교섭경쟁정책) 자문위원	98		1			이후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 위원	99		1			이후
신광영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민간위원	04-현			1		이후
신동식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00		1			동시
	중앙인사위원회 자문위원	04-현			1		이후/동시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02-03			1		이후/동시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위원	98-01		1			이전/동시
심상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05			1		이후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04			1		이후
안경환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04-현			1		이후/동시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03-현			1		이후/동시
안병찬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00-현		1			이후
안영도	언론중재위원회 제16대 국회의원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00		1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06-			1		이후/동시
오연천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 비상임 위원	83				1	이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04-			1		이후
	경찰홍보자문위원회 자문위원	05-			1		이후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 위원	98		1			이전
오일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03			1		이후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05			1		이후
오충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발전위원회 위원장	04-현			1		이후/동시
유순신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 위원	01		1			동시
유중원	법무부 수출 중소기업법률자문단	99-현		1			이후/동시

이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 활동기간 비교
			YS	DJ	ROH	기타	
	단장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98-현		1			이후/동시
윤덕홍	교육 부총리	03			1		이후
윤석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위원	95	1				이전
윤수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98-01		1			이전/동시
	국무총리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04-현			1		이후
	한국방송공사 이사	03-			1		이후
이기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위원	03-현			1		이후/동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05-현			1		이후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04-현			1		이후
이돈명	행정자치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00-현			1		이후/동시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	04-06			1		이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	06-현			1		이후
이병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1-		1			이전
이부영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00-현		1			이후
이세중	국무총리소속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장	03-현			1		동시
	국무총리자문 정부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98		1			이전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98-00		1			이후
이영순	서울시의회 시의원(민주당, 서울 구로구)	-02		1			이후
	서울시의회 시의원, 여성특위 위원장 의원	95	1				동시
이은영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				1		이후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99-01		1			이후/동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97-98		1			이후/동시
	정책기획위원회 제1분과(정치행정) 위원	01-03		1			이후/동시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	02		1			이후
	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열린우리당)	현			1		이후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03-04			1		이후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04-현			1		이후
	16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천년민주당)	00-03		1			이후
이종오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 본부장	02			1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03			1		이후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03-현			1		이후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03			1		이후
이효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98-현		1			이후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고문	05-현			1		이후

이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 활동기간 비교
			YS	DJ	ROH	기타	
임재연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00-현		1			동시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회 위원	00-현		1			동시
임지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1		1			이후
장명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90				1	이전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00		1			이전
장을병	15대 국회의원(삼척, 민주·무소속·국민신당·국민회의·민주 당)	96-00	1				이후
장하성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97		1			이전
장호순	언론중재위원회 지방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위원	06			1		이후
정대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00-현		1			이전/동시
정미홍	서울시 홍보담당관 의전비서관	95-97	1				이전
정범구	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1			이후
정성현	농어촌발전위원	94	1				이전
정용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03-현			1		이후/동시
	국가정보화평가위원회 위원장	03-현			1		이후/동시
정현백	경찰위원회 위원	02-05			1		이후
	행정자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현			1		이후
조 국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	00-01		1			이전
	국무조정실 성매매방지기획단 위원	03-04			1		이후/동시
	대검찰청 위원	04-05			1		이후
	여성부 성매매방지기획단 위원	03-04			1		이후/동시
	여성부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03-			1		이후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03			1		이후
이삼열	통일원(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93	1				이전
이상희	한국방송공사 이사	00		1			이후/동시
이석연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03-현			1		이후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00-현		1			이후
이선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1		이후
조돈문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03-현			1		이후/동시
조순경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02-			1		동시
조영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6대 위원장	04-05			1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3대 위원장	05-			1		이후
조용환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	03-			1		이후
조준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1	이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01-		1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05-			1		이후
조중래	서울시 시정개혁실무위원회 위원	98-현		1			이전/동시
조홍준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통합분과 복지보건팀 위원	03			1		이후
조흥식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상임위원	02-			1		이후/동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01-		1			이후

이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 활동기간 비교
			YS	DJ	ROH	기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02		1			이후
주동항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통합분과 사회언론팀 위원	03-			1		동시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회 제2분과 제2소위 위원	98-		1			이전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 관리위원	00-		1			이전
	정부 공보실 전문위원	98-99		1			이전
지재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비상임위원	03-현			1		이후/동시
최배근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04			1		이후
최병철	국세청 국세조세관리관	04-05			1		이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보좌관	97-98		1			이후/동시
최영도	행정자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01-현		1			이전/동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04-			1		이후
	한국방송공사 이사	93-96	1				이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95	1				이전
최영태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현			1		이후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위원	현			1		이후
	국세청 한국조세연구원 자문위원				1		이후
최은순	대통령비서실 국민참여수석실 제도개선팀 비서관	03			1		이후
	대통령비서실 국민참여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	03			1		이후
	대통령비서실 참여혁신수석실 민원제안비서관	03-04			1		이후
최장집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98-99		1			이후
	국회 아시아태평양정책연구회 고문	00-현		1			이후
최현섭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00		1			이전
	교육부 학교정책협의회의 연구분과위원장	04-05		1			이후
하태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평가위원	02-현		1			이후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99-02		1			이전/동시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전문위원회 위원장	03-04			1		이후
	노동부 정책자문위원	04-현			1		이후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99-		1			이전
	서울시 업무평가위원	02-04			1		이후
한경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99		1			이후

이름	직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 활동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한명숙	국무총리	06			1		이후
	여성부 장관	01		1			이후
	환경부장관	03-04			1		이후
	16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민주당)	00-04		1			이후

	17대 국회의원(경기고양일산갑, 열린우리당)	04-06			1		이후
한병용	여주시 시장	78-80				1	이전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02-04			1		이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90-94				1	이전
한상희	국가정보원 자문위원회 위원	03-05			1		이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99		1			이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관련자본과위원회 위원	02-			1		이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84-85				1	이전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03-05			1		이전
한승헌	감사원장(17대)	98-99		1			이후
	감사원 원장 서리	98		1			이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05-현			1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94	1				이전
한인섭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03-04			1		이후/동시
	대검찰청 제도개혁위원회 위원	98		1			이후
함성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99-01		1			이후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00-02		1			이후
함세웅	행정자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04-현			1		이후
홍성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94	1				이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국장	2		1			이후
황인성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	04-05			1		이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05-현			1		이후
	북한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특별팀 팀장	현			1		이후
황평우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정책평가위원	04-현			1		이후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청계천문화재보존 소위원회 문화재위원	04-현			1		이후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시민정책자문위원	04-현			1		이후
합계	313개 공직(150명) (%)		22 (7.0)	113 (36.1)	158 (50.5)	20 (6.4)	이전 : 51 이전/동시 : 1

							2 동시 : 15 이후/동시 : 4 8 이후 : 180 미파악 : 7
--	--	--	--	--	--	--	---

다음으로 150명이 맡은 313개의 공직을 소속기구별 및 정권별로 분류해보았다. 공직의 소속기구는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 각 부처, 입법부, 사법부, 독립기구, 지방정부 등 모두 7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²⁰⁾ <표 6-2>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정권별로 공직 진출 시기를 보면 참여연대 임원이 본격적으로 정권에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김대중 정부이다. 김대중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참여연대 임원들의 공직 진출은 노무현 정부에 전체의 반(50.5%)을 차지하며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표 6-2> 참여연대 임원의 공직 진출 기구 및 진출 정권

구 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기타	합계	%
대통령	6	48	63	4	121	38.7
국무총리	0	16	16	3	35	11.2
정부 각 부처	5	27	51	5	88	28.1
입법	1	5	3	3	12	3.8
사법	1	1	2	1	5	1.6
독립기구	6	13	21	2	42	13.4
지방정부	3	3	2	2	10	3.2
합계	22	113	158	20	313	100.0
%	7.0	36.1	50.5	6.4	100.0	

다음으로 이들이 진출한 직책의 소속기구를 보면 대통령 소속기구에 해당하는 공직이 전체 313개 가운데 121개(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 각 부처 소속 88개(28.1%), 독립기구 42개(13.4%), 국무총리 소속 35개(11.2%) 순서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대한 정책자문이나 정부와의 정책협의 등도 없을 뿐더러 조직에 관련된 인사들 가운데 정부의 공직에 진출하는 예도 없다”(조대엽, 1996 : 407)고 밝힌 바 있는 한 연구결과를 무색케 만든다.

다음으로 각 임원들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시기와 공직을 수행하던 시기를 각각 비교하여 <표 6-3>을 구성해보았다. 이 표에서 ‘이전’은 참여연대 임원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맡았던 공직을 의미하며, ‘이후’는 참여연대 임원 활동 이후에 맡은 공직을 의미한다. ‘동시’는 참여연대 임원 활동 시기와 공직 수행 시기가 연도상으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동시’는 참여연대 임원 활동 시작 전부터 맡았던 공직을 참여연대 임원이 된 이후에도 계

20) 313개의 공직의 소속기구별 분류는 <표 6-4>부터 <표 6-10>을 참조

속 수행한 것을 의미하며, ‘이후-동시’는 참여연대 임원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공직을 맡아 참여연대 임원을 계속 유지한 경우를 말한다.²¹⁾〈표 6-3〉은 참여연대 임원들의 공직 진출 가운데 57.5%가 임원 활동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통령 관련기구 공직 진출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참여연대 임원이 진출한 121개의 대통령 관련 공직 가운데 무려 70개(57.9%)가 참여연대 활동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에서의 임원활동이 공직진출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313개의 공직 가운데 참여연대에서의 임원활동과 공직활동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가 75개(이전 / 동시 12 + 동시 15 + 이후 / 동시 48) 로 전체 공직 313개 가운데 23.9 % (이전 / 동시 3.8% + 동시 4.8% + 이후 / 동시 15.3%)라는 사실이다.

<표 6-3> 참여연대 임원활동 시기와 공직수행 시기 비교결과

구 분	이전	이전 동시	동시	이후 동시	이후	미파악	합계	%
대통령	17	7	6	21	70	0	121	38.7
국무총리	8	0	3	5	17	2	35	11.2
정부 각 부처	11	3	2	15	55	2	88	28.1
입법	2	0	0	0	9	1	12	3.8
사법	1	0	0	2	2	0	5	1.6
독립기구	8	1	3	5	24	1	42	13.4
지방정부	4	1	1	0	3	1	10	3.2
합계	51	12	15	48	180	7	313	100.0
%	16.3	3.8	4.8	15.3	57.5	2.2	100.0	

특히 대통령 직속의 공직에 참여연대 인사들이 대거 영입된 현상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이 있다. 위의 표에서 대통령 소속 공직을 더욱 자세히 분석해 보면 121개의 총 직책 가운데 90여 개에 가까운 직책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혹은 위원에 해당한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각종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 더욱 활성화되어 일명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다.²²⁾ 이러한 위원회의 위원 임명은 행정부 내부에서

21) 공직 수행 시기와 참여연대 임원활동 시기를 구분하는데 기준이 된 것은 참여연대의 정기총회 자료집과 각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러나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공직 수행 시기의 연도까지만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매년 초 발간되는 정기총회 자료집 역시 그 이후의 자세한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연도상으로 같은 해에 두 직위를 수행하였다고 해도 실제 겹침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기총회가 열리는 시기까지 참여연대 임원 활동을 하고 그 이후 같은 해 공직에 취임하면서 참여연대 임원을 사임하는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 ‘동시’의 분류에 포함된 경우는 2년 이상 두 시기가 중복되는 경우만으로 제한하였다

22) 다음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의 명칭과 설치 연도이다. 이 중 대다수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후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중앙일보, 2005. 6.4). 부패방지위원회(2002.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5.2), 정책기획위원회(1989.6), 노사정위원회(1998.3), 중소기업특별위원회(1998.4), 지방이양추진위원회(1999.8),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0.8),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2.1), 동북아시아위원회(2003.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3.4),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4), 교육혁신위원회(2003.6),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2),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2004.2),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4.5), 정보공개위원회(2004.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1), 행정중심복합도시조성

인정받은 관료적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지향과 정책적 성향에 의한 일명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바로 이러한 인사의 중심에 참여연대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 예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대부터 현재 3대에 이르는 위원장 모두가 참여연대 출신이다.

물론 각종 위원회의 자문위원까지 공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 대통령 직속 12개 국정과제위원회 가운데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곳은 실행정수도이전추진위뿐이고, 나머지 위원회는 모두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말 그대로 자문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행정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중앙일보, 2004. 7. 15).

이 중에서도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막강하다. 12개의 국정과제위원회를 총괄하는 곳이 정책기획위원회인데, 1980년 ‘21세기 위원회’로 출범했던 정책기획위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단순 자문조직에서 국정과제의 추진과 총괄조정 역할을 맡는 핵심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종합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나머지 11개 위원회 위원들이 겸임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개편 중이다. 장관급 예우를 해주는 위원장에게는 차와 운전기사·비서 등이 제공되며, 월급이 없는 대신 월 100만원 안팎의 수당과 월 500만원 한도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신용카드가 지급된다. 민간위원들도 업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7만-10만원의 회의비를 받는다(중앙일보, 2004. 7. 14).

또한 이들을 견제하는 외부의 장치도 미비하다. 위원회들은 연간 수십억 원대의 정부예산을 쓰면서도 그동안 감사원 감사 한 번 받은 적이 없다. 형식상 자문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없다. 통상적인 국정감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국감을 하려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국감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권고가 나온 게 고작이다(중앙일보, 2004. 7. 15). 실로 대통령 직속의 각종 위원회가 행정부 내의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공직임은 더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

참여연대도 자체 정관을 통해서 정권과의 거리를 두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관을 통해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정관 제5장 제39조).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긴다. 내규로 정한다는 주요 임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정확히 명시된 바가 없고, 공직의 범위 역시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표 6-3>은 참여연대의 공직에 대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추진위원회(2005.4),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2005.5),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2004.5),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미구성).

않음을 여실히 확인해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 대한 보고서에서 ‘삼성의 인력으로 국무회의도 운영할 수 있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위의 자료들은 오히려 참여연대의 인적 네트워크가 국무회의를 넘어서 청와대와 같은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권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²³⁾

그렇지 않아도 최근의 시민운동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차례로 집권하면서 과거 민주화투쟁 당시의 동지들인 운동권 인사들을 대거 권력의 실세로 포진시키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민주화 이후 정·관계의 요직으로 진출한 운동권 인사의 비중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관계의 요직으로 진출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비중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위의 자료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생한 각종 권력형 비리에 시민운동이 과거와 같이 끈질긴 비판과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도 이런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자임한 시민운동의 중립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된 모습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과거의 육사 출신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듯이, 요즈음의 시민운동은 민주화된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운동의 ‘관변화’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홍위병’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운동’만으로는 도저히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한 도저히 이 부조리한 한국의 현실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 ‘시민운동단체’가 아니고 정치집단 즉 ‘정당’이라고 밝혀야 한다. ‘무늬만 시민운동’은 국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기만행위일 뿐이다.

시민운동이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의 권력논리나 시장의 이윤추구 논리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구성의 논리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권력을 견제하고 시장을 감시하는 시민운동 본래의 순수한 모습이 지켜질 때 국민들은 시민운동에 적극 공감하게 된다. 시민운동이 권력에 편승하고 나아가서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민운동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운동이 정치에 참여해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시민운동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발상만큼이나 자가당착적인 행동이다.

23) 최근 한 연구소는 한국의 시민단체가 정부정책에 대한 높은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시민단체의 인사들 다수가 정계에 진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2005).

<표 6-4> 참여연대 임원의 대통령 산하 기구 진출 현황

이 름	직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이석연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03-현			1		이후
한승헌	감사원장(17대)	98-99		1			이후
한승헌	감사원 원장 서리	98		1			이후
공성진	감사원 자문위원	04			1		이후
한상희	국가정보원 자문위원회 위원	03-05			1		이전
오충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 위원회 위원장	04-현			1		이후 / 동시
윤석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위원	95	1				이전
김동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분과 자문위원	01-현		1			이후
장명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90				1	이전
김명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95-현	1				이전
김범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91				1	이전
이선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1		이후
공성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03-현			1		이후
이효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98-현		1			이후
윤수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98-01		1			이전 / 동시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04-현			1		이후
김상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자문위원	99-04		1			이후
한경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99		1			이후
함성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99-01		1			이후
오일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03			1		이후
김호기	제16대 대통령취임사준비위원회 위원				1		이후
김대환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회 간사 경제2분과	02-03			1		이후
이종오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 본부장	02			1		이후
이은영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				1		이후
박진도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1		이후
김균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자문위원	03-			1		이전 / 동시
법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00-현		1			이후 / 동시
하태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평가위원	02-현		1			이후
조영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6대 위원장	04-05			1		이후
송창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담당관실 전문위원 (교통분야)	99-		1			동시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6대 위원장	03-현			1		이후

이 름	직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신동식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00		1			동시
김동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03			1		이후
김영호	노사정위원회 위원	01		1			이후 / 동시
김상조	노사정위원회 책임전문위원	98-99		1			이전
박종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04-06			1		이후
오연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06-			1		이후 / 동시
정대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00-현		1			이전 / 동시
황인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국장	02		1			이후
백승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00-01		1			이전 / 동시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02-04			1		이후
김형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00-02		1			이전 / 동시
송두환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05-현			1		이후 / 동시
신동식	중앙인사위원회 자문위원	04-현			1		이후 / 동시
박영숙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01		1			이후
박은정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04-			1		이후 / 동시
하태권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99-02		1			이전 / 동시
유순신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의 위원	01		1			동시
박연철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02-05			1		이후
이은영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99-01		1			이후 / 동시
김정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현			1		이후
김환석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	05-현			1		이후
김병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위원	05			1		이후
장하성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97		1			이전
김용익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사회정책 수석비서관	현			1		이후
김성재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00-01		1			이후
이백만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	06-현			1		이후
선미라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해외언론비서관	05-현			1		이후
민병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비서관					1	이전
최은순	대통령비서실 국민참여수석실 제도개선팀 비서관	03			1		이후
최은순	대통령비서실 국민참여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	03			1		이후
최은순	대통령비서실 참여혁신수석실 민원제안비서관	03-04			1		이후
김성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99-00		1			이후
이종오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03			1		이후
이병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1-		1			이전
임지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1		1			이후
이은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97-98		1			이후 / 동시

이 름	직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박찬욱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98-01		1			이전 / 동시
김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5			1		이후
최장집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98-99		1			이후
손덕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93-96	1				이전
김태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97-01		1			이전
김대환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장	00-04		1			이후 / 동시
백종만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통합분과 복지보건팀 위원	03-현			1		이후 / 동시
김형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통합분과 복지보건팀 위원	03			1		이후
조홍준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통합분과 복지보건팀 위원	03			1		이후
김호기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통합분과 사회언론팀 위원	03-			1		이후 / 동시
주동황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통합분과 사회언론팀 위원	03-			1		동시
박진도	정책기획위원회 국가발전전략분과산업노동팀 위원	03-현			1		이후
곽노현	정책기획위원회 국가시스템개혁분과 정치행정위원	03-현			1		이후
김홍남	정책기획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	01-03		1			동시
이은영	정책기획위원회 제1분과(정치행정) 위원	01-03		1			이후 / 동시
김용익	정책기획위원회 제4분과 위원	01		1			이후
정용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03-현			1		이후 / 동시
이기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위원	03-현			1		이후 / 동시
송두환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	00-현		1			이후 / 동시
김민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관리전문위원	04			1		이후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04-06			1		이후
김연명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04-05			1		이후
심상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05			1		이후
조흥식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상임위원	02-			1		이후 / 동시
정성현	농어촌발전위원	94	1				이전
박영숙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02		1			이후
박영숙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00		1			이후
신광영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민간위원	04-현			1		이후
백종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05			1		이후

이 름	직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김동호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	04-현			1		이후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05-현			1		이후
박재승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	05-현			1		이후
김금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	05-			1		이후
한상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99		1			이전
박원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03-현			1		이후 / 동시
조준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1	이후
이부영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00-현		1			이후
최현섭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00		1			이전
최병철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보좌관	97-98		1			이후 / 동시
황인성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	04-05			1		이후
황인성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05-현			1		이후
황인성	북한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특별팀 팀장	현			1		이후
김태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95-96	1				이전
김유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4-현			1		이후
손혁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4-현			1		이후 / 동시
김금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4-현			1		이후
김상근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98-00		1			이후
김학천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	98		1			이후
주동황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회 제2분과 제2소위 위원	98-		1			이전
김상근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단 단장	99		1			이후
김영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98		1			동시
노정현	행정쇄신위원회 위원	93-97	1				이전
신광식	제4기 정부정책평가위원회 경제1위원회 위원	03			1		이후
성락인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96-98		1			이후 / 동시
합 계	121개 공직(87명) (%)		6 (5.0)	48 (39.7)	63 (52.1)	4 (3.3)	이전 : 17 이전 / 동시 : 7 동시 : 6 이후 / 동시 : 21 이후 : 70 미파악 : 0

<표 6-5> 참여연대 임원의 국무총리 산하 기구 진출 현황

이름	직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 등 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한명숙	국무총리	06			1		이후
임재연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00-현		1			동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6			1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03			1		이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97-98		1			이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01-03		1			이후
김제완	공정거래위원회 외부평가원					1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제4기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05-			1		이후
김선웅	금융감독원 법무실	00-현		1			이후 / 동시
임재연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회 위원	00-현		1			동시
강경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관련자심사분과위 위원	00-02		1			이후
조준희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01-		1			이후
한상희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관련자본과위원회 위원	02-			1		이전
조국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	00-01		1			이전
김상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02-04			1		이후 / 동시
김민배	기획예산처 정부산하기관평가단 평가위원	05			1		이후
오연천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 비상임위원	83				1	이전
이기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05-현			1		이후
장명봉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00		1			이전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	04-06			1		이후
지재원	정부 공보실 전문위원	98-99		1			이전
조국	국무조정실 성매매방지기획단 위원	03-04			1		이후 / 동시
정용덕	국가정보화평가위원회 위원장	03-현			1		이후 / 동시
이효재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고문	05-현			1		이후
조흥식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01-		1			이후
황평우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정책평가위원	04-현			1		이후
성락인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97-현		1			이후 / 동시
이세중	국무총리소속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장	03-현			1		동시

이 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 동 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윤수경	국무총리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04-현			1		이후
김병섭	국무총리실 부패방지대책협의회 위원	99		1			이전
김홍남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사회문화소위 위원	03-현			1		이후
배종대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1	?
신광식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00		1			이후
이은영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	02		1			이후
이세중	국무총리자문 정부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98		1			이전
합계	35개 공직(29명) (%)		0 (0)	16 (45.7)	16 (45.7)	3 (8.6)	이전 : 8 이전 / 동시 : 0 동시 : 3 이후 / 동시 : 5 이후 : 17 미파악 : 2

<표 6-6> 참여연대 임원의 각 부처 산하 기구 진출 현황

이 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 동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김민배	정무 제1장관실 자문위원	95	1				동시
손혁재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05-현			1		이후 / 동시
박은정	교육부 교육개혁 자문위원	97		1			이후
곽노현	교육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98-현		1			이후 / 동시
윤덕홍	교육 부총리	03			1		이후
최현섭	교육부 학교정책협의회 연구분과위원장	01-03		1			이후
하태권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전문위원회 위원장	03-04			1		이후
강경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 위원	05-			1		이후
김대환	노동부 21대 장관	04-06			1		이후
하태권	노동부 정책자문위원	04-현			1		이후
김태기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96-98		1			이전
김금수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	97-03		1			이후 / 동시

이 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조돈문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03-현			1		이후 / 동시
박은주	문화관광부 21세기문화정책위원회 위원	현			1		이후
김성재	문화관광부 5대 장관	02-03			1		이후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06			1		이후
김성재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98-99		1			이후
법장	문화관광부 한국방문의해 추진위원	99		1			이전
김동호	문화관광부 차관	92-93				1	이전
황평우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청계천문화재보존 소위원회 문화재위원’	04-현			1		이후
황평우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시민정책자문위원	04-현			1		이후
김서중	문화관광부 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현			1		이후
김민환	문화관광부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현			1		이후
손혁재	문화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3심의위원회 위원장	03-현			1		이후 / 동시
송두환	문화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97		1			이후 / 동시
김명곤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03-05			1		이후
김상근	법무부 검찰위원회 위원장	05-현			1		이후
박원순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99-현		1			이후 / 동시
박원순	법무부 민사소송법개정 심사위원	00		1			이후
한상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84-85				1	이전
유종원	법무부 수출 중소벤처기업법률자문단 단장	99-현		1			이후 / 동시
배종대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1	?
백승헌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05-현			1		이후
한인섭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03-04			1		이후 / 동시
안경환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04-현			1		이후 / 동시
성락인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개선 위원회’ 위원장	04-현			1		이후
배종대	대검찰청 부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05			1		이후
조국	대검찰청 위원	04-05			1		이후
한인섭	대검찰청 제도개혁위원회 위원	98		1			이후
송두환	검찰 제도개혁위원회 위원	98		1			이후
한상희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03-05			1		이전

이 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안경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03-현			1		이후 / 동시
김연명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발전위원회 위원	03-04			1		이후
김연명	보건복지부 연금제도 발전위원회 전문위원	02-			1		이후
김익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무위원	95	1				이전
조흥식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02		1			이후
박노형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					1	?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	00		1			이전
조순경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02-			1		동시
차병직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비상임위원	03-현			1		이후 / 동시
조 국	여성부 성매매방지기획단 위원	03-04			1		이후 / 동시
조 국	여성부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03-			1		이후
한명숙	여성부 장관	01		1			이후
함성득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00-02		1			이후
민병석	외교통상부 체코슬로바키아 대사					1	이전
신광식	외교통상부(통상교섭경쟁정책) 자문위원	98		1			이후
박재승	외교통상부 행정심판위원	97		1			이후
최영태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현			1		이후
이석연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00-현		1			이후
신광식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 위원	99		1			이후
김상조	재정경제부 장관자문기구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 위원	00-01		1			이후
최병철	국세청 국세조세관리관	04-05			1		이후
최영태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위원	현			1		이후
최영태	국세청 한국조세연구원 자문위원				1		이후
오연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04-			1		이후
박영숙	통일부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	98-00		1			이후
김창국	통일부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	00		1			이후
오일환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05			1		이후
이삼열	통일원(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93	1				이전

이 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박순성	통일부 민족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	96-현	1				이전 / 동시
하태권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99-		1			이전
박상필	행정자치부 공익사업평가위원회 위원	02-04			1		이전 / 동시
최배근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04			1		이후
김병섭	행정자치부 조직진단변화관리자문위원회 위원장	04			1		이후
법 장	행정자치부(내무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94	1				이전
정현백	경찰위원회 위원	02-05			1		이후
박병섭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	04-현			1		이후
오연천	경찰홍보자문위원회 자문위원	05-			1		이후
김정기	행정자치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현			1		이후
박재승	행정자치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위촉직)	00		1			이후
이돈명	행정자치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00-현			1		이후 / 동시
이기우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04-현			1		이후
손혁재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04-현			1		이후 / 동시
함세웅	행정자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04-현			1		이후
정현백	행정자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현			1		이후
최영도	행정자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01-현		1			이전 / 동시
김용태	행정자치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현			1		이후
한명숙	환경부장관	03-04			1		이후
합 계	88개 공직(65명) (%)		5 (5.7)	27 (30.7)	51 (58.0)	5 (5.7)	이전 : 11 이전 / 동시 : 3 동시 : 2 이후 / 동시 : 15

이 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이후 : 55 미파악 : 2

<표 6-7> 참여연대 임원의 입법부 산하 기구 진출 현황

이 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박영숙	13대 국회의원(전국구, 평민당·신민당·민주당)					1	이전
장열병	15대 국회의원(삼척, 민주·무소속·국민신당·국민회의·민주당)	96-00	1				이후
이재정	16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천년민주당)	00-03		1			이후
정범구	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1			이후
한명숙	16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민주당)			1			이후
한명숙	17대 국회의원(경기도양일산갑, 열린우리당)				1		이후
이은영	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열린우리당)	현			1		이후
공성진	17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 한나라당)	04-			1		이후
민병석	국회도서관장					1	?
최장집	국회 아시아태평양정책연구회 고문	00-현		1			이후
강성남	국회입법조사분석실 법사행정담당관	89-99				1	이전
박진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00-		1			이후
합계	12개 공직(11명) (%)		1 (8.3)	5 (41.7)	3 (25.0)	3 (25.0)	이전 : 2 이전 / 동시 : 0 동시 : 0 이후 / 동시 : 0 이후 : 9 미파악 : 1

<표 6-8> 참여연대 임원의 사법부 산하 기구 진출 현황

이름	직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 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조국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03			1		이후
이은영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03-04			1		이후
김명신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95-현	1				이후 / 동시
유중원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98-현		1			이후 / 동시
김남근	판사	92-00				1	이전
합계	5개 공직(5명) (%)		1 (20.0)	1 (20.0)	2 (40.0)	1 (20.0)	이전 : 1 이전 / 동시 : 0 동시 : 0 이후 / 동시 : 2 이후 : 2 미파악 : 0

<표 6-9> 참여연대 임원의 독립기구 진출 현황

이름	직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 동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조영환	국가인권위원회 3대 위원장	05-			1		이후
김만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03-			1		이후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사무총장	05-			1		이후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01		1			동시
최영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04-			1		이후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초대위원장	01-04		1			이후 / 동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00-		1			동시
윤수경	한국방송공사 이사	03-			1		이후
이상희	한국방송공사 이사	00		1			이후 / 동시
이세중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98-00		1			이후
김창남	한국방송공사 정책연구실 객원연구원	95-96	1				이전
김선우	한국방송공사 이사	00-03		1			동시
최영도	한국방송공사 이사	93-96	1				이전
김금수	한국방송공사 이사	00-03		1			이후
김창국	한국방송공사 이사	00		1			이후
박원순	한국방송공사 이사	03			1		이후
백승헌	한국방송공사 비상임 이사	05-현			1		이후
김선우	EBS 이사	현			1		이후
김학천	EBS 사장					1	?
남영진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	03-현			1		이후
최영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95	1				이전

이 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한상범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90-94				1	이전
김경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현			1		이후
김동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현			1		이후
박원순	방송위원회 법률자문특별위원회 위원	00-현		1			이후 / 동시
성유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03-현			1		이후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03-현			1		이후
안병찬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00-현		1			이후
이효성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03			1		이후
조용환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	03-			1		이후
박한춘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02			1		이후 / 동시
김학천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위원	93	1				이전
주동황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 관리위원	00-		1			이전
신동식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02-03			1		이후 / 동시
신동식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위원	98-01		1			이전 / 동시
홍성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94	1				이전
한승헌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94	1				이전
조준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05-			1		이후
장호순	언론중재위원회 지방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위원	06			1		이후
박한춘	언론중재위원회 제17대 국회의원선거기사심의위원	현			1		이후
박한춘	언론중재위원회 제16대 국회의원선거기사심의위원				1		이후
안영도	언론중재위원회 제16대 국회의원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00		1			이후
합계	42개 공직(32명) (%)		6 (14.3)	13 (31.0)	21 (50.0)	2 (4.8)	이전 : 8 이전 / 동시 : 1 동시 : 3 이후 / 동시 : 5 이후 : 24 미파악 : 1

<표 6-10> 참여연대 임원의 지방정부 진출 현황

이 름	직 책	기간	진출 시기				참여연대활동 기간비교
			YS	DJ	ROH	기타	
오연천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 위원	98		1			이전
배종대	서울시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1	?
정미홍	서울시 홍보담당관 의전비서관	95-97	1				이전
이영순	서울시의회 시의원(민주당, 서울 구로구)	-02		1			이후
이영순	서울시의회 시의원, 여성특위 위원장 의원	95	1				동시
하태권	서울시 업무평가위원	02-04			1		이후
조중래	서울시 시정개혁실무위원회 위원	98-현		1			이전 / 동시
박재우	경기도 지방공무원 연수원	93-현	1				이전
한병용	여주시 시장	78-80				1	이전
심상완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04			1		이후
합계	10개 공직(9명) (%)		3 (30.0)	3 (30.0)	2 (20.0)	2 (20.0)	이전 : 4 이전 / 동시 : 1 동시 : 1 이후 / 동시 : 0 이후 : 3 미파악 : 1

VII. 결론

시민사회의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를 논할 때 주로 지적되는 문제는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이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이 서구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서구의 시민운동을 모델로 한 현재의 운동방식이 많은 한계와 취약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서구적 의미의 시민사회를 기준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를 평가하면 그것은 분명 왜곡되고 취약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특히 권위주의 정치체계에 의한 국가중심적 동원이 전통사회는 물론이고 근·현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됨으로써 한국의 시민사회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불완전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보고서의 시작에서 참여연대의 삼성보고서의 발표가 이 글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가 삼성이라는 기업집단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왜곡되고 취약한 모습일 수도 있다. 서구의 시장적 관점에서 볼 경우 인적 네트워크라는 연결망을 통한 기업 운영은 한국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한계와 취약성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참여연대를 분석해보았을 때, 이러한 한계와 왜곡은 동일한 모습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적 네트워크의 닫힌 연결망에 기반한 시민운동 역시, 자발적 결사와 민주적 참여라는 서구의 시민사회 모델과는 동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번 참여연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시민사회와 권력의 유착 역시 서구의 시민사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항하는 독자적 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가 아니었다. 동일한 인적 구성을 모태로 하여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정권에 의해 동원되고, 또 필요에 따라 국가권력의 요소요소에 침투하여 시민운동의 목표를 위해 국가의 자원을 동원하는 권력과 시민단체의 융합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정부로부터 독립된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 서로 포섭되고 동원하며 연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비판한 한국사회의 경제 영역이나, 이 글이 비판하고 있는 시민사회 영역 역시 동일한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한국사회 전반의 운용 메커니즘을 한국사회의 구조적·역사적 취약성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특수성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서구적 기준에서 왜곡된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을 확인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러한 특수성의 근원이 되는

한국 시민사회의 문화적·제도적 토양을 밝히고 나아가서 그러한 토양을 오늘날 우리의 시민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일이다(腹部民夫, 2005).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의 문화적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시민사회 내의 특정한 가치체계나 생활양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규범적인 판단의 영역에 머물러 왔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서구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구식 자원봉사활동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를 기준으로만 한국의 시민사회를 평가하고자 하는가. 왜 우리는 한국의 특수성을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가. 왜 자원적 결사에 의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전통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동창회나 향우회 등의 활동은 공익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전제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전통윤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지향적인 성격을 재발견하고, 이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현대적 시민단체의 활동과 접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는 시장기능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여전히 자신이 속한 가족과 그것의 보다 확대된 형태인 혈연, 지연, 학연 단체와 같은 연고집단에 강한 애착과 헌신을 보이는 우리의 정서가 바로 우리 시민사회의 독특한 배경이다. 심지어는 시민단체의 자원동원과정도 이러한 연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회원의 참여 혹은 시민단체 활동가의 충원 방식에 연고에 의한 동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송호근, 1998). 또한 시민단체의 조직운영은 물론 정책적 목표의 실현방식 역시 연고에 의한 다양한 자원의 동원, 특히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국가 자원의 동원 메커니즘이 자리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이다. 참여연대라는 한국 시민운동의 대표적 단체의 운용 메커니즘도 바로 이러한 한국적 맥락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연고집단은 물론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 측면과 동시에 연고집단은 국가나 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12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러한 연고의 긍정적 기능의 한 예인 셈이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오히려 연고에 기반한 공동체적 관심과 배려를 무한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놓여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서구의 ‘시민사회론’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분명 권력이나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구성 원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를 자원적 결사에 의한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단체의 출현이라는 서구적 척도로 평

가하면 우리는 분명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왜곡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의 차원에서 한국을 보면 우리는 다른 어느 사회보다 오히려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식 즉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이기도 하다(유석춘 외, 2003).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전통을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상욱, 2002, “NGO 성장과 인적자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1권 제3호.
- 권태환·이재열, 1998, “사회운동조직간 연결망분석”, 『한국사회과학』 20(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기획예산처, 2004, 『2004년 예산개요 참고자료』.
- 김경동, 2001, “시민사회 사상사 개관”, 『시민사회포럼』 워크숍 기초연설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 _____, 2003, “한국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부산시민단체 대표자협의회 제1차 워크숍 발표문.
- 김영래, 1996, “한국에 있어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논총창간호』 1,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 김용민, 2000, “시민단체의 목적전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학, 2003,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 김호기, 2000, “4·13 총선과 시민운동 : 총선시민연대의 활동과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 『사회비평』, 제24권.
- 대한민국 정부, 2003, 『2004년도 예산』.
- 박상필, 1999,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과 지원체제”,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 박영선, 2003, “참여연대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NGO학과.
- 박영희, 2005,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 박원순, 1999a, “국가개혁과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 『국가개혁 특별학술회의 결과자료집』, 한국정치학회.
- _____, 1999b,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 박원순 변호사의 미국 시민운동 기행, 예담.
- 송 북, 1990,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현대문학.
- _____, 1991, 『조직과 권력』, 나남.
- 송호근, 1998, “신사회운동 참여자 분석”, 『한국사회과학』 제20권 제3호.
- 유석춘, 1997a, “유교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전통과현대』, 창간호(여름).
- _____, 1997b, “동아시아 유교자본주의 재해석 : 제도주의적 시각”, 『전통과현대』, 겨울호(3호).
- _____, 1998, “동양과 서양, 그리고 자본주의”, 『계간 사상』, 1998, 봄호.
- _____, 2001, “한국의 사회자본 : 연고집단”, 석현호·유석춘 공편,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현대.
- _____, 2002a, 『한국의 사회발전 :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전통과현대.
- _____, 2002b,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 _____, 김용민, 2000, “한국 시민단체의 목적전치”, 『동서연구』, 12권, 2호.
- _____, 장미혜, 1998, “한국 비영리·비정부 부문과 사회발전 : 연고집단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10권 제2호.
- _____, 장미혜·김태은, 2000, “동아시아의 연고주의와 세계화”, 『전통과현대』, 가을호(통권 13호).
- _____, 장미혜·배영, 2002, “사회자본과 신뢰 : 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동서연구』, 제14권 제1호.
- _____, 장미혜·정병은·배영, 2003, 『사회자본 : 이론과 쟁점』, 그린.
- 조대엽, 1996, “1990년대 사회운동 조직 분화의 유형적 특성”, 『한국사회학』 제30집, 여름호.
- 조희연, 1995, “민중운동과 시민사회, 시민운동”,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주성수, 2002,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중앙 NGO에 참여한 지식인의 역할 분석”, 『한국 시민사회와 지식인』, 아르케.
- 참여연대, 1994, 『참여연대 창립자료집』.
- _____, 1995, 『정기총회자료집 : 제1회 정기총회』.
- _____, 1996a, 『참여민주사회를 향한 시민행동 : 제2회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 1996b, 『참여민주사회를 향한 시민행동 : 제3회 정기총회·2주년 창립 자료집』
- _____, 1997, 『시민의 힘 세상을 바꾼다 : 창립3주년 기념식 및 제 4회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 1999, 『시민의 힘 세상을 바꾼다 : 제5차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 2000, 『처음 그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 2001, 『제7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 2002, 『제8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 2003, 『제9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 2004, 『제10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 2005, 『제11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 2005, 「삼성보고서 :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해부한다」.
- _____, 2006, 『제12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 최낙관, 2004,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와 개혁 : 그 논리와 한계』, 자유기업원.
- 월간조선, 2001, “심층취재 : ‘종합형 NGO’ 참여연대” 11월호.
- 중앙일보, 2004, “위원회 정부 시대 시리즈”, 7.13 - 7.15.
- 중앙일보, 2005, “긴급점검 : 대통령 직속 위원회”, 6.4 - 6.6.
- 한겨레21, 2004, “언론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통권 제526호.
- 한국일보, 2001, “한국의 인맥 : 한국의 ‘국경없는 의사들’”, 11.31.

腹部民夫, 2005, 『開発の経済社会学』, 文眞堂.

부 록 1 참여연대 역대 임원

(2006년 2월 현재)

□ 1994~1995년(제1차 정기총회)

- ▶ 공동대표 :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
- ▶ 사무처장 : 조희연
- ▶ 감 사 : 박재승, 황석화
- ▶ 고 문 : 김찬국, 박완서, 이세중, 이호철, 이효재, 장을병, 주종환
- ▶ 자문위원 : 강연균, 구중서, 김금수, 김동완, 김민환, 김상근, 김승균, 김학천, 박기호, 박남운, 배손근, 백낙청, 서홍관, 염무웅, 오용호, 유명종, 윤종률, 이경의, 이문옥, 이수인, 이시재, 이인호, 이재정, 정윤희, 조준희, 조홍준, 진상해, 최병철, 최송화, 최장집, 한경남, 한명숙, 한병용, 한준수, 황상근
- ▶ 운영위원 : 이삼열(위원장), 이화숙·유명종(부위원장), 강경선, 권진관, 김대환, 김민배, 김선웅, 김연명, 김제완, 김중배, 박연철, 박원순, 박은정, 박호성, 박홍식, 손혁재, 신광식, 안경환, 안영도, 양길승, 오재식, 유선호, 유팔무, 윤종현, 이석연, 이화숙, 임진철, 조홍식, 조희연, 채수일, 한인섭, 홍성우(이상 당연직), 김경남, 김성재, 김용태, 김종수, 김준묵, 김창준, 김현준, 김형식, 김호기, 김호열, 나병식, 남규우, 박성준, 박홍규, 법안스님, 서광태, 성락인, 송기영, 송두환, 심재식, 유초하, 이교정, 이근복, 이근성, 이부영, 이영순, 이은영, 이종오, 이주향, 이호열, 장두환, 장호순, 정윤희, 정인숙, 정현백, 조일홍, 최상천, 최일숙, 한면희, 허인희, 황의인, 황주석(이상 선출직)
- ▶ 집행위원 : 안경환(위원장), 강경선·박원순·조희연·채수일(부위원장), 김대환, 김중배, 박연철, 박은정, 박호성, 안영도, 양길승, 오재식, 유명종, 이대훈, 이삼열, 이화숙, 홍성우(이상 당연직), 곽노현, 박석운, 손혁재, 한인섭(이상 선출직)

□ 1996년(제2차 정기총회)

- ▶ 공동대표 :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 ▶ 사무처장 : 박원순
- ▶ 감 사 : 박재승, 이대용
- ▶ 고 문 : 김찬국, 박완서, 이세중, 이호철, 이효재, 주종환, 한승헌
- ▶ 자문위원 : 강연균, 구중서, 김금수, 김동완, 김민환, 김상근, 김승균, 김학천, 박기호, 박남운, 배손근, 백낙청, 서홍관, 염무웅, 오용호, 유명종, 윤종률, 이경의, 이수인, 이시재, 이재정, 정윤희, 조준희, 조홍준, 진상해, 최병철, 최장집, 한명숙, 한병용, 한준수, 황상근
- ▶ 운영위원 : 안경환(위원장), 유명종·이은영(부위원장), 강명구, 권진관, 김대환, 김민배, 김연명, 김제완, 김중배, 김창국, 박연철, 박원순, 박은정, 박호성, 박홍식, 손혁재, 신윤희, 안경환, 안영도, 양길승, 오재식, 이기우, 이석연, 이신행, 이은영, 이정옥, 조홍식, 조희연, 채수일,

한인섭(이상 당연직), 곽노현, 김경남, 김성재, 김용태, 김종수, 김준묵, 김창준, 김현준, 김형식, 김호기, 김호열, 나병식, 남규우, 도정일, 박경자, 박성준, 법안스님, 서광태, 성락인, 송기영, 송두환, 신광식, 심재식, 유초하, 이교정, 이근복, 이근성, 이남복, 이부영, 이상철, 이영순, 이종오, 이주향, 이창식, 이호열, 이화숙, 임진철, 정윤광, 정인숙, 정현백, 조일홍, 최상천, 최일숙, 한면희, 황의인, 황주석(이상 선출직)

- ▶ 집행위원 : 양길승(위원장), 박원순·조희연·채수일(부위원장),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안경환, 유명중, 이은영, 김대환, 박연철, 박은정, 박호성, 안영도, 이대훈, 이신행, 조홍식, 유팔무, 신윤환(이상 당연직), 박석운, 손혁재, 한인섭, 김호기, 한정화(이상 선출직)

□ 1997년(제3차 정기총회)

- ▶ 공동대표 :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 ▶ 사무처장 : 박원순
- ▶ 감 사 : 박재승, 이대용
- ▶ 고 문 : 김찬국, 박완서, 이세중, 이호철, 이효재, 주종환, 한승헌, 한상범, 홍성우, 박영숙, 박상중, 김승훈
- ▶ 자문위원 : 김민환, 김학천, 배손근, 백낙청, 이경의, 이수인, 이시재, 이재정, 정윤희, 최송화, 최장집, 이삼열, 최현섭, 곽진, 신영복, 조영환, 이해진, 하죽봉, 윤영근, 명진스님, 김정남, 이영숙, 이영섭, 임진택, 김명곤, 정현경, 이영수, 신학철, 유인택, 김금수, 김승균, 한명숙, 한병용, 한준수, 임중빈, 안부근
- ▶ 운영위원 : 안경환(위원장), 유명종·이은영·유중원(부위원장), 강명구, 권진관, 김대환, 김연명, 김중배, 김창국, 박원순, 박은정, 박홍식, 손혁재, 신윤희, 안경환, 안영도, 양길승, 오재식, 유명종, 유중원, 윤태범, 이기우, 이석연, 이신행, 이은영, 이정옥, 조홍식, 조희연, 채수일, 한인섭, 김지현, 백종만, 이석연, 임현영, 정무성(이상 당연직), 곽노현, 김성재, 김형식, 김호기, 도정일, 성락인, 유초하, 이남복, 이종오, 이주향, 정현백, 조일홍, 최상천, 한면희, 이화숙, 박호성, 김민배, 유팔무, 손덕수, 정종섭, 노정선, 정유성, 김창남, 김익기, 조성우, 김창준, 송기영, 송두환, 황의인, 최일숙, 박연철, 김제완, 윤종현, 황병일, 김호열, 남규우, 법안스님, 이근복, 임진철, 손인숙, 김용태, 박경자, 김종수, 김준묵, 나병식, 박성준, 문국주, 김현준, 이교정, 이부영, 이영순, 이창식, 정윤광, 정인숙, 황주석, 정성현, 이상덕, 서광태, 신광식, 심재식, 김종찬, 장선우, 이근성, 이상철, 이호열, 최필세(이상 선출직)
- ▶ 집행위원 : 양길승(위원장), 박원순·조희연·채수일(부위원장),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안경환, 유명종, 이은영, 김대환, 박은정, 안영도, 이신행, 조홍식, 신윤희, 이대훈, 박석운, 손혁재, 김호기, 한인섭, 한정화

□ 1998년(제4차 정기총회)

- ▶ 공동대표 : 김중배, 김창국, 박상중
- ▶ 사무처장 : 박원순
- ▶ 협동사무처장 : 조희연, 손혁재, 차병직, 이대훈
- ▶ 감 사 : 박재승
- ▶ 고 문 : 김승훈, 김찬국, 박완서, 박영숙, 이세중, 이호철, 이효재, 주종환, 한승헌, 한상범, 홍성우, 주섭일, 이돈명
- ▶ 자문위원 : 강영균, 강행원, 곽진, 구중서, 김정남, 김금수, 김동완, 김명곤, 김민환, 김상근, 김승균, 김영호, 김종찬, 김학천, 명진스님, 박기호, 배손근, 백낙청, 신영복, 신학철, 안부근, 염무웅, 오영호, 유인택, 윤영근, 이경의, 이삼열, 이수인, 이시재, 이영섭, 이영수, 이영숙, 이재정, 이해진, 임중빈, 임진택, 정윤희, 정현경, 조영환, 조준희, 최병철, 최송화, 최장집, 최현섭, 하죽봉, 한명숙, 한병용, 한준수, 함세웅, 황상근
- ▶ 운영위원 : 안경환(위원장), 유명종·이은영·유중원(부위원장), 강명구, 권진관, 김대환, 김연명,

김중배, 김창국, 박동희, 박상중, 박원순, 박찬욱, 박홍식, 백종만, 손혁재, 심병호, 안경환, 안영도, 양길승, 유명종, 윤태범, 이광택, 이기우, 이석연, 이성렬, 이신행, 이은영, 이정옥, 임현영, 장하성, 정무성, 조돈문, 조홍식, 조희연, 차병직, 채수일, 최민섭, 최유미, 한인섭(이상 당연직), 곽노현, 김민배, 김성재, 김용태, 김익기, 김제완, 김종찬, 김종수, 김준목, 김창남, 김창준, 김현준, 김형식, 김호기, 김호열, 나병식, 남규우, 노정선, 도정일, 문국주, 박경자, 박동희, 박성준, 박연철, 박호성, 법안스님, 서광태, 성락인, 손덕수, 손인숙, 송기영, 송두환, 신동근, 심재식, 유초하, 유팔무, 윤종현, 이교정, 이근복, 이근성, 이남복, 이부영, 이상덕, 이상철, 이영순, 이종오, 이주향, 이호열, 임진철, 장선우, 정성현, 정유성, 정윤광, 정종섭, 정현백, 조성우, 조일홍, 최상천, 최일숙, 최필세, 황병일, 황의인, 황주석(이상 선출직)

- ▶ 집행위원 : 양길승(위원장), 채수일(부위원장), 권진관, 김대환, 김중배, 김창국, 신광식, 안경환, 안영도, 유명종, 유중원, 이대훈, 이신행, 이은영, 이광택, 임현영, 조홍식, 박상중, 박원순, 박찬욱, 장하성, 한인섭, 김칠준, 차병직, 채수일, 손혁재, 조희연, 김환석, 김용숙, 김기식(이상 당연직), 김지현, 김호기, 박석운, 이창식, 조용환, 한면희(이상 선출직)

□ 1999년(제5차 정기총회)

- ▶ 공동대표 : 김중배, 박상중, 한명숙
- ▶ 사무처장 : 박원순
- ▶ 협동사무처장 : 손혁재, 차병직, 김칠준, 조희연, 이대훈
- ▶ 감 사 : 윤종훈
- ▶ 고 문 : 김동호, 김선종, 김창국, 박재일, 오재식, 이상희
- ▶ 자문위원 : 강송식, 기우봉, 김경재, 김명신, 김병걸, 김영동, 김은경, 김정기, 남영진, 박노형, 박무익, 박태범, 배종대, 송영방, 심재택, 안병찬, 유순하, 윤수경, 이대공, 이두식, 이오덕, 이인철, 이종대, 임길진, 정범구, 정용덕, 정운영, 최홀, 최승은
- ▶ 운영위원 : 안경환(위원장), 유명종·유중원·명진스님(부위원장), 강경민, 고행열, 김 라, 김선웅, 김영태, 박종례, 박진도, 백삼철, 변재용, 설병진, 송창석, 신윤환, 안덕상, 안해룡, 양용희, 여균동, 오상현, 위병선, 이현, 이기명, 이나경, 이백만, 이병호, 상훈, 이석원, 이성우, 이옥숙, 이재관, 이종국, 이춘형, 이홍균, 이효성, 임광빈, 임국진, 임정근, 임통일, 장남일, 장유환, 전부영, 전윤표, 전하진, 정수복, 정지영, 조중래, 주은경, 진영중, 차광주, 차용호, 최정식, 최정환, 하승수, 한찬욱, 함성득, 허성희, 홍남숙, 홍수옥, 황지우, 황평우
- ▶ 집행위원 : 양길승(위원장)

□ 2000년(제6차 정기총회)

- ▶ 공동대표 : 김중배, 박상중, 박은정
- ▶ 사무처장 : 박원순
- ▶ 협동사무처장 : 차병직, 손혁재, 이대훈, 진영중, 김형완, 김호기
- ▶ 감 사 : 윤종훈

- ▶ 고 문 : 김동호, 김선종, 김승훈, 김찬국, 김창국, 박병호, 박영숙, 박완서, 박재일, 박종규, 오재식, 원경선, 이돈명, 이상희, 이세중, 이지형, 이효재, 장임원, 주섭일, 주종환, 한상범
- ▶ 자문위원 : 강송식, 강원돈, 강행원, 광노현, 광진, 권오승, 기우봉, 김민환, 김선우, 김승균, 김영호, 김용익, 김우종, 김은규, 김제완, 김종대, 김창남, 김형식, 김호열, 남규우, 도정일, 민병석, 박성준, 박연철, 박한춘, 백낙청, 법안스님, 서광태, 선미라, 성유보, 손덕수, 송두환, 신동근, 신동식, 신영복, 신학철, 심재식, 안경환, 안해룡, 양재혁, 여균동, 오병철, 오상현, 유중원, 윤덕홍, 윤종현, 이근복, 이기우, 이두식, 이병혁, 이삼열, 이석원, 이영섭, 이영수, 이종오, 이효성, 임정근, 임재연, 임지순, 임진택, 장명봉, 장선우, 전동균, 정미홍, 정준성, 정지영, 정진성, 정현백, 조영황, 조일홍, 조준희, 조준래, 조중래, 최상식, 하죽봉, 한영철, 황상근, 황의인, 황주석, 황지우
- ▶ 운영위원 : 양길승(위원장), 유명종·명진스님(부위원장), 권진관, 기우봉, 김동춘, 김상조, 김선웅, 김영태, 김은경, 김중배, 김진욱, 김창준, 김철준, 김현숙, 김환석, 남기현, 명진스님, 박상증, 박원순, 박은정, 박진도, 손혁재, 심현천, 양길승, 오무승, 유명종, 이광일, 이상철, 이상훈, 이윤정, 이은영, 이정, 이광일, 임종대, 임현영, 장남일, 장하성, 정의엽, 조희연, 진영종, 차병직, 최민섭, 최유미, 최은순, 한인섭, 하승수(이상 당연직), 강경민, 강치원, 김대환, 김용태, 김종찬, 김준목, 김지현, 도진순, 박석운, 박찬욱, 박호성, 배강원, 변재용, 송기영, 송창석, 신광식, 신윤환, 안덕상, 안영도, 양윤재, 우석균, 유팔무, 이건, 이교정, 이병호, 이옥숙, 이정옥, 이창식, 이호열, 임국진, 임옥상, 임통일, 장유환, 전용표, 정수복, 정중섭, 조용환, 조홍식, 주은경, 채수일, 최일숙, 최자웅, 최정식, 한면희, 한창규, 홍수옥, 홍지웅, 황병일(이상 선출직)
- ▶ 집행위원 : 박원순(위원장), 조희연(부위원장), 권진관, 김중배, 김동춘, 김철준, 김형완, 김호기, 김환석, 명진스님, 박상증, 박진도, 박원순, 박은정, 손혁재, 양길승, 유명종, 이상훈, 이은영, 임종대, 임현영, 장하성, 조희연, 진영종, 차병직, 최은순, 최민섭, 하승수, 한인섭

□ 2001년(제7차 정기총회)

- ▶ 공동대표 :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 박은정
- ▶ 사무처장 : 박원순
- ▶ 협동사무처장 : 김호기, 손혁재, 진영종, 차병직, (이대훈, 김형완)
- ▶ 감사 : 윤종훈, 정주식
- ▶ 고 문 : 강근환, 김동호, 김승훈, 김우종, 김영호, 김준영, 김찬국, 문정현, 박경서, 박병호, 박재일, 박종규, 오재식, 오충일, 이돈명, 이상희, 이선종, 이세중, 이인호, 이지형, 이필립, 장임원, 주섭일, 주종환, 한상범
- ▶ 자문위원 : 강송식, 강원돈, 강행원, 광노현, 광진, 권오승, 김민환, 김승균, 김제완, 김종대, 김창남, 김태기, 김향기, 김형식, 김호열, 김홍남, 남규우, 남영진, 도정일, 민병석, 박연철, 박은주, 박찬욱, 박한춘, 백낙청, 백옥인, 서광태, 성유보, 손덕수, 송두환, 신동근, 신동식, 신영복, 신학철, 심재식, 안경환, 안해룡, 양재혁, 여균동, 오병철, 오상현, 오연천, 우찬규, 유순신, 윤종현, 이근복, 이두식, 이명준, 이병혁, 이삼열, 이석원, 이영섭, 이영수, 이종오,

이화숙, 이효성, 임옥상, 임재연, 임지순, 임진택, 장명봉, 장선우, 전경옥, 전동균, 정미홍, 정용덕, 정준성, 정지영, 정진성, 정현백, 조영황, 조일홍, 조중래, 최상석, 하죽봉, 한영철, 황상근, 황의인, 황주석, 황지우

- ▶ 운영위원 : 양길승(위원장), 유명종·명진스님·양운재·황인성(부위원장), 기우봉, 김남근, 김성일, 김수진, 김영철, 김영태, 김유선, 김준홍, 김중배, 김진옥, 김창국, 김창준, 김형태, 김호기, 김환석, 명진스님, 박상중, 박원순, 박은정, 박진도, 손혁재, 양길승, 양운재, 유명종, 이상경, 이상철, 이완희, 이은영, 이정현, 임종대, 임현영, 장하성, 정정원, 조국, 조희연, 진영종, 차병직, 최영태, 최은순, 하승수, 하태권, 한인섭, 한찬욱, 홍성주, 황인성(이상 당연직), 강치원, 김대환, 김선우, 김선웅, 김영진, 김용관, 김용태, 김종찬, 김준묵, 김진호, 김현, 김홍숙, 나경희, 도진순, 문부식, 민영서, 박노해, 박석운, 박성준, 박재우, 박문식, 배강원, 변재용, 법안스님, 송기영, 송창석, 신윤환, 이건, 이교정, 이병호, 이신행, 이정옥, 이창식, 임통일, 정종섭, 조홍식, 박호성, 백천기, 신광식, 신광영, 심상완, 안덕상, 양용희, 우석균, 위병선, 유대길, 윤석인, 이광일, 이기우, 이해숙, 이형진, 임국진, 전윤표, 전효관, 정대화, 정수복, 조대엽, 조상호, 지재원, 채수일, 최일숙, 최자웅, 최정식, 최장렬, 한면희, 한성준, 한창규, 홍수옥, 홍지웅, 홍훈, 황병일(이상 선출직)
- ▶ 집행위원 : 조희연(위원장), 김남근·김유선(부위원장), 김동춘, 김수진, 김영태, 김중배, 김창국, 김창준, 김호기, 김환석, 명진스님, 박상중, 박원순, 박은정, 박진도, 손혁재, 양길승, 유명종, 양운재, 이은영, 임종대, 임현영, 장하성, 진영종, 차병직, 최영태, 최은순, 하승수, 하태권, 한인섭, 한찬욱, 황인성

□ 2002년(제8차 정기총회)

- ▶ 공동대표 : 박상중, 최영도, 이상희
- ▶ 사무처장 : 박영선, 김기식
- ▶ 협동사무처장 : 김남근, 장유식, 진영종, 차병직
- ▶ 감 사 : 윤종훈, 정주식
- ▶ 고 문 : 강근환, 김동호, 김영호, 김우종, 김준영, 노정현, 명진스님, 문정현, 박병호, 박재일, 박종규, 백낙청, 법장스님, 세민스님, 신동식, 오재식, 오충일, 원경선, 이돈명, 이삼열, 이선종, 이세중, 이인호, 이지형, 장임원, 주섭일, 주종환, 한상범
- ▶ 자문위원 : 강송식, 강원돈, 강행원, 공성진, 광노현, 광진, 권오승, 김민환, 김승균, 김만흠, 김유선, 김제완, 김종대, 김창남, 김태기, 김향기, 김형식, 김홍남, 도정일, 민병석, 박은주, 박한춘, 백옥인, 성유보, 송두환, 신기현, 신동근, 신영복, 신학철, 심재식, 안경환, 안해룡, 양길승, 양재혁, 오병철, 오상현, 오연천, 오일환, 우찬규, 유명종, 유순신, 유중원, 유팔무, 윤덕홍, 윤정화, 윤종현, 이금룡, 이두식, 이명준, 이병혁, 이석원, 이영수, 이종오, 이필립, 이화숙, 이효성, 임옥상, 임지순, 임진택, 장명봉, 장선우, 전경옥, 전동균, 정미홍, 정용덕, 정지영, 정진성, 정현백, 조순경, 조중래, 지광스님, 지홍스님, 하죽봉, 한영철, 홍순진, 황상근, 황의인, 황주석, 황지우
- ▶ 운영위원 : 손혁재(위원장), 조희연·문준식·양윤재(부위원장), 김기식, 김남근, 김동춘, 김미든, 김병섭, 김병수, 김상조, 김수진, 김연명, 김영철, 김영태, 김익환, 김진태, 김칠준, 김형태, 김호기, 김환석, 문준식, 박상중, 박영선, 박원순, 박호성, 박홍식, 손혁재, 심상완, 심현천, 양윤재, 오현섭, 유정근, 이상철, 이상희, 이영환, 이은영, 이재근, 임주일, 임현영, 장유식, 장하성, 조국, 조동문, 조희연, 주종환, 진영종, 진형우, 차병직, 채건희, 최정희, 최두민, 최영도, 최영태, 하승수, 한인섭, 홍성주, 홍연숙(이상 당연직), 기우봉, 김도원, 김대환, 김용관, 김용태, 김인충, 김종찬, 김준묵, 김진호, 김현, 김홍숙, 나경희, 도진순, 문부식, 민영서, 박노해, 박문식, 박석운, 박성준, 박은정, 박재우, 박진도, 백천기, 법안스님, 변재용, 송기영, 송창석, 신광식, 신광영, 안덕상, 양용희, 안철택, 우석균, 유대길, 윤석인, 이광일, 이기우, 이병호, 이상경, 이신행, 이정옥, 이해숙, 이형진, 임종대, 임통일, 전운표, 전효관, 정대화, 정수복, 정종섭, 조대엽, 조상호, 조홍식, 지재원, 최자웅, 최정식, 최창렬, 한면희, 한창규, 황인성, 홍수옥, 홍훈, 황병일, 홍세화(이상 선출직)
- ▶ 집행위원 : 박원순(위원장), 김기식, 김남근, 김동춘, 김병섭, 김상조, 김수진, 김영태, 김영철, 김익환, 김칠준, 김형태, 김호기, 김환석, 문준식, 박상중, 박영선, 박원순, 박호성, 박홍식, 손혁재, 심현천, 양윤재, 이상희, 이영환, 박홍식, 임현영, 장유식, 장하성, 조희연, 진영종, 차병직, 최영도, 최영태, 하승수, 한인섭

□ 2003년(제9차 정기총회)

- ▶ 공동대표 : 박상중, 최영도
- ▶ 사무처장 : 박영선, 김기식

- ▶ 협동사무처장 : 김남근, 윤상철, 이대훈, 장유식, 진영중, 차병직, 하승수
- ▶ 감 사 : 윤종훈, 성종규
- ▶ 고 문 : 김중배, 김창국, 명진스님, 박은정, 안경환, 양길승, 오재식, 유명중, 이삼열, 홍성우
- ▶ 자문위원 : 강근환, 강송식, 강원돈, 공성진, 곽노현, 곽진, 김민환, 김만흠, 김승균, 김용태, 김우중, 김제완, 김준영, 김창남, 김향기, 김현, 김형식, 김홍남, 노정현, 도정일, 문정현, 박병호, 박재일, 박한춘, 백낙청, 백옥인, 법장스님, 송두환, 세민스님, 신기현, 신동식, 신영복, 신학철, 양용희, 양재혁, 오병철, 오연천, 오충일, 우석균, 우찬규, 유순신, 유중원, 유팔무, 윤정화, 이금룡, 이돈명, 이두식, 이병혁, 이선종, 이신행, 이영수, 이정옥, 이지형, 임옥상, 임지순, 장명봉, 장임원, 전경옥, 전효관, 정대화, 정용덕, 정주식, 조상호, 조순경, 주섭일, 지광스님, 지홍스님, 하죽봉, 한면희, 한영철, 홍순진, 황상근, 황지우
- ▶ 운영위원 : 손혁재(위원장), 조희연·양윤재(부위원장), 강성남, 김균, 김기식, 김남근, 김병수, 김상조, 김수진, 김진태, 김창준, 김칠준, 박상증, 박상표, 박순성, 박영선, 박원순, 박철순, 오현섭, 윤상철, 이광수, 이대훈, 이영환, 이영희, 임주일, 임현영, 장유식, 전부영, 정현미, 조국, 조동문, 주종환, 진영중, 진형우, 차병직, 최두민, 최영도, 최영태, 하승수, 전해복, 홍성태(이상 당연직), 고세훈, 기우봉, 김덕수, 김도원, 김병주, 김영준, 김상균, 김서중, 김선우, 김진국, 김준묵, 김홍숙, 나경희, 도진순, 류정근, 박노해, 박문식, 박병섭, 박상필, 박석운, 박성준, 박은주, 박재우, 박홍렬, 배삼희, 백천기, 법안스님, 서정석, 송기영, 송창석, 안철택, 오세중, 윤석인, 윤주영, 이기우, 이천용, 이해숙, 이형진, 임채성, 전윤표, 정중섭, 조홍식, 주경복, 주동환, 주진오, 지재원, 최배근, 최자웅, 최정식, 한인섭, 한창규, 황병일, 황인성(이상 선출직)
- ▶ 집행위원 : 박원순(위원장), 차병직(부위원장), 김균, 김기식, 김남근, 김상조, 김수진, 박상증, 박순성, 박영선, 박원순, 손혁재, 양윤재, 윤상철, 이대훈, 이영환, 이영희, 임주일, 임현영, 장유식, 조국, 조희연, 진영중, 차병직, 최영도, 최영태, 하승수, 홍성태

□ 2004년(제10차 정기총회)

- ▶ 공동대표 : 박상중(목사), 최영도(변호사), 이선중(교무, 원불교 특별교구장)
- ▶ 사무처장 : 박영선, 김기식
- ▶ 협동사무처장 : 김남근(변호사), 윤상철(교수, 한신대 사회학), 이대훈(평화운동가), 장유식(변호사), 진영종(교수, 성공회대 영어학)
- ▶ 감사 : 성종규(변호사), 서영철(회계사)
- ▶ 고문 : 김중배(언론인), 김창국(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명진(스님), 박은정(교수, 이화여대 법학), 안정환(서울대 법대 학장), 양길승(녹색병원 대표), 오재식(월드비전 아태지역본부 북한사업부 부장), 유명종(수암건설 대표), 이삼열(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홍성우(변호사)
- ▶ 자문위원 : 강근환(전 서울신학대 총장), 강송식(한우물 대표), 곽진(교수, 상지대 한문학), 김덕수(예술인, 참여연대 홍보대사), 김만흠(교수, 가톨릭대 국제학부),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김영준(LMG 대표이사), 김용태(민중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김우중(문학평론가), 김준영(목사), 김현(원불교 교무), 김홍남(이화여대 박물관 관장), 도정일(교수, 경희대 영문학), 문정현(신부), 박노해(시인, 나눔문화연구소 이사),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박은주(김영사 대표이사), 박재일(한살림 대표), 박한춘(전 서울외신클럽 회장), 백낙청(시민방송 이사장), 법장(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서경석(교수, 한양대 국문학), 세민(스님, 해인사 주지), 송두환(변호사), 신동식(한국여성언론인연합 대표), 신영복(교수, 성공회대 경제학), 양용희(교수, 호서대 사회복지학), 양재혁(교수, 성균관대 철학), 오병철(제심관 관장), 오연천(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오충일(목사, 노동일보 대표), 우찬규(학교재 대표), 유순신(유엔파트너즈), 유중원(변호사), 유팔무(교수, 한림대 사회학), 윤정화(휴먼브릿지 대표이사), 이금룡(이니시스 대표), 이돈명(변호사), 이두식(교수, 홍익대 미대), 이신행(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 이정옥(교수,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이지형(성균관대 명예교수), 이형진(아르케출판사 대표), 임옥상(화가), 임지순(교수, 서울대 물리학), 장명봉(교수, 국민대 법학), 장임원(前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정대화(교수, 상지대 교양과), 정용덕(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주식(변호사), 조상호(나남출판사 대표), 조순경(교수, 이화여대 여성학), 주섭일(내일신문 비상임 고문), 지광(스님, 능인선원), 황인성(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 ▶ 운영위원 : 박상중(공동대표), 최영도(공동대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이선중(공동대표), 손혁재(운영위원장), 조희연(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윤재(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병직(집행위원장), 김동춘(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태(정책위원장), 박영선(사무처장), 김기식(사무처장), 장유식(협동사무처장), 진영종(협동사무처장), 이대훈(협동사무처장), 김남근(협동사무처장), 윤상철(협동사무처장), 김상조(경제개혁센터 소장), 조국(사법감시센터 소장), 김수진(의정감시센터 소장), 최영태(조세개혁센터 소장), 박순성(평화교육센터 소장), 김칠준(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김연명(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정근(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이광수(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보공개사업단장), 강성남(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 김창준(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장),
 이현욱(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김균(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임현영(참여사회아카데미 원장), 김동광(시민과학센터 소장), 남상철(공익법센터 소장
 대행), 주중환(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은파(회원모임 참종다), 김진태(회원모임
 막사밭), 맹행일(회원모임 시민운동공부모임), 박상표(회원모임 우리땅), 박수영(회원모임
 청년마을), 이명영(회원모임 어깨동무), 이양행(회원모임 피오름), 임주일(회원모임
 산사랑), 조동문(회원모임 통일일꾼)(이상 당연직), 기우봉(회원모임 산사랑 전 회장),
 김도원(아원디아아이), 김병주(변호사), 김상균(문화방송 프로듀서), 김서중(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김영희(변호사), 김종복(시민운동공부모임, 사업가), 김준묵(미래 MNB
 대표이사), 김창남(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나경희(예가 대표), 박문식(회계사),
 박상철(언론개혁회원모임(준), 직장인), 박상필(교수, 성공회대 NGO대학원),
 박성준(움직이는 학교 대표), 박재우(교수, 한국외대 중국학), 배삼희(변호사),
 백천기(목사, 명동교회), 법안(스님, 금전사), 송창석(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안철택(교수, 고려대 독문과), 오세중(변리사), 유정근(전 청년마을 촌장, 직장인),
 윤석인(전 한국자원봉사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윤주영(세무사), 이선노(산사랑 회원,
 인쇄업), 이은주(아름다운 사람들 필진, 주부), 이종권(작지사 회장, 동국대 교수),
 이천용(의사), 이해숙(수필가), 이해숙(청년마을 회원, 직장인), 임채성(교수,
 그리스도신학대 경영정보학), 전윤표(서울방송 라디오본부 부국장),
 전효관(시민문화네트워크 대표), 정현미(전 청년마을 촌장, 직장인), 주경복(교수, 건국대
 불문학), 주동향(교수, 광운대 신문방송학), 지홍(스님, 조계사 주지), 최배근(교수, 건국대
 경제학), 최자웅(성공회 사제), 한면희(교수,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한명희(자영업),
 한인섭(교수, 서울대 법학), 한창규(법무사)(이상 선출직)

- ▶ 집행위원 : 차병직(집행위원장), 김동춘(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중(공동대표),
 최영도(공동대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이선종(공동대표), 손혁재(운영위원장),
 조희연(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윤재(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태(정책위원장),
 박영선(사무처장), 김기식(사무처장), 장유식(협동사무처장), 진영중(협동사무처장),
 이대훈(협동사무처장), 김남근(협동사무처장), 윤상철(협동사무처장), 김상조(경제개혁센터
 소장), 조국(사법감시센터 소장), 김수진(의정감시센터 소장), 최영태(조세개혁센터 소장),
 박순성(평화군축센터 소장), 이현욱(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김연명(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정근(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김균(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임현영(참여사회아카데미 원장), 김동광(시민과학센터 소장), 남상철(공익법센터
 소장 대행), 임주일(회원모임협의회 회장)(이상 당연직), 김호기(교수, 연세대 사회학),
 백승현(변호사)(이상 선출직),
- ▶ 정책위원 : 홍성태(정책위원장), 한준(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2005년(제11차 정기총회)

- ▶ 공동대표 : 박상중, 이선종

- ▶ 사무처장 : 박영선, 김기식
- ▶ 협동사무처장 : 김남근, 윤상철, 이대훈, 장유식, 성종규
- ▶ 감 사 : 서영철, 김영희
- ▶ 고 문 : 김중배, 김창국, 명진, 박은정, 안경환, 양길승, 오재식, 유명종, 이삼열, 홍성우
- ▶ 자문위원 : 강근환, 강송식, 광진, 김덕수, 김만흠, 김승균, 김영준, 김용태, 김우종, 김준영, 김현, 김홍남, 도정일, 문정현, 박노해, 박석운, 박은주, 박재일, 박한춘, 백낙청, 서경석, 세민, 송두환, 신동식, 신영복, 양용희, 양재혁, 오병철, 오연천, 오충일, 우찬규, 유순신, 유중원, 유팔무, 이금룡, 이돈명, 이두식, 이신행, 이정옥, 이지형, 이형진, 임옥상, 임지순, 장명봉, 장임원, 정대화, 정용덕, 정주식, 조상호, 조순경, 주섭일, 지광, 김범주, 임현영, 최자웅
- ▶ 운영위원 : 박상중, 이선종, 손혁재(운영위원장), 양윤재(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병직, 김동춘, 홍성태, 박영선, 김기식, 장유식, 이대훈, 김남근, 윤상철, 성종규, 김상조, 한상희, 김수진, 최영태, 박순성, 김칠준, 윤찬영, 임정근, 이광수, 윤태범, 김창준, 이현욱, 이병천, 남상철, 주종환, 전미연, 정을호, 맹행일, 박상표, 박영조, 이명영, 임주일, 조동문, 김철희(이상 당연직), 강양미, 강지혜, 기영상, 기우봉, 김동훈, 김미정, 김상균, 김서중, 김영태, 김원철, 김정수, 김종복, 김준묵, 김창남, 나경희, 박문식, 박상철, 박상필, 박성준, 박재우, 박재홍, 배삼희, 백천기, 법안, 선미라, 송창석, 안철택, 오세중, 유영표, 윤석인, 윤주영, 이상미, 이선노, 이은주, 이종권, 이천용, 이해숙, 임채성, 전윤표, 정찬휘, 주동황, 최배근, 한규현, 한면희, 한명희, 한창규(이상 선출직)
- ▶ 집행위원 : 박상중, 이선종, 손혁재, 양윤재, 차병직(집행위원장), 김동춘(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태, 박영선, 김기식, 장유식, 이대훈, 김남근, 윤상철, 성종규, 김상조, 한상희, 김수진, 최영태, 박순성, 이현욱, 윤찬영, 임정근, 이병천, 남상철, 맹행일
- ▶ 정책위원 : 홍성태(정책위원장), 한준(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2006년(제12차 정기총회)

- ▶ 공동대표 : 박상중, 이선종, 임종대
- ▶ 사무처장 : 박영선, 김기식
- ▶ 협동사무처장 : 김민영, 박원석, 이재명, 이태호
- ▶ 감 사 : 서영철, 김영희
- ▶ 고 문 : 김중배, 김창국, 명진, 박은정, 안경환, 양길승, 오재식, 유명종, 이삼열, 홍성우
- ▶ 자문위원 : 강근환, 강송식, 광진, 김덕수, 김만흠, 김승균, 김승현, 김영준, 김용태, 김우종, 김준영, 김창남, 김현, 김홍남, 도정일, 문정현, 박노해, 박문식, 박석운, 박성준, 박은주, 박재우, 박재일, 박한춘, 백낙청, 서경석, 세민, 송두환, 신동식, 신영복, 양용희, 양재혁, 오병철, 오연천, 오충일, 우찬규, 유순신, 유중원, 유팔무, 윤석인, 윤중여, 이금룡, 이돈명, 이두식, 이신행, 이정옥, 이지형, 이형진, 임옥상, 임지순, 장명봉, 장임원, 정대화, 정주식, 조상호, 조순경, 주동황, 주섭일, 지광, 김범주, 임현영, 최자웅
- ▶ 운영위원 : 박상중, 이선종, 임종대, 손혁재(운영위원장), 장유식·진영종(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병직, 김남근, 김연명, 양윤재, 성종규, 송호창, 윤상철, 윤태범, 최현, 홍성태, 조희연,

박영선, 김기식, 김민영, 박원석, 이재명, 이태호, 김상조, 한상희, 강원택, 최영태, 박순성, 이대훈, 김칠준, 김종해, 임정근, 정용덕, 이광수, 김창준, 이현욱, 이병천, 남상철, 맹행일, 주종환, 이재욱, 정을호, 박상표, 박종희, 이해숙, 조동문, 김철희, 김동훈(이상 당연직), 강양미, 기영상, 기우봉, 김상균, 김영수, 김영태, 김원철, 김종복, 김준묵, 나경희, 박상철, 박상필, 박홍식, 배삼희, 백종만, 백천기, 법안, 안철택, 오세중, 유영표, 이상미, 이선노, 이은주, 이증권, 이천용, 임주일, 임채성, 장연희, 전윤표, 정찬위, 조홍식, 한명희, 한창규(이상 선출직)

- ▶ 집행위원 : 박상중, 이선종, 임종대, 손혁재, 장유식, 진영종, 차병직(집행위원장), 김남근·김연명·양윤재(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성종규, 송호창, 윤상철, 윤태범, 최현, 홍성태, 조희연, 박영선, 김기식, 김민영, 박원석, 이재명, 이태호, 김상조, 한상희, 강원택, 최영태, 박순성, 김종해, 임정근, 정용덕, 이현욱, 이병천, 남상철, 맹행일(이상 당연직) 성종규, 송호창, 윤상철, 윤태범, 최현(이상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 ▶ 정책자문위원회 : 조희연(위원장), 김호기, 박원순, 박호성, 안경환, 양길승, 장하성, 한인섭
- ▶ 정책위원회 : 홍성태(정책위원장)

부 록 2 참여연대 정관

(2006년 2월 현재)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5조

〔소재〕 참여연대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 가입〕

- ①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임협의회〕

- ① 참여연대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참여연대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 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2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 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2개월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정책위원장단과 선출직 집행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정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활동기구의 임원을

임명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임기〕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 ②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 ①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6조

[자문위원] 참여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각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7조

[감사]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5절 정책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제28조

[정책위원회]

- ①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실행위원과 산하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제 29조

[정책자문위원회]

- ①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30조

[활동기구]

- ①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1조

[사무처]

- ①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4조

〔지역조직〕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5조

〔부설기관〕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36조

〔회계 연도〕 참여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예산과 결산〕

-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입〕 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39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 ①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0조

〔준용 규정〕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41조

[잔여 재산의 귀속 등]

- ① 참여연대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참여연대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 ② 기타의 사항은 법인의 해산과 관련된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1996년 3월 1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1997년 9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1998년 9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1년 2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3년 3월 1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5년 3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6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참여연대 보고서



2002년 6월 21일 1판1쇄 발행

2022년 1월 27일 1판2쇄 발행

발행처	자유기업원	발행인	최승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07236)		
전화	02-3774-5000	팩스	0502-797-5058

※ 본 파일은 2002년 발행한 NGO시리즈 NO.14 『참여연대 보고서』
책을 재편집하여 PDF로 변환한 것입니다.

© 자유기업원, 2022

비매품